

2015
OECD 농업정책과 무역 연구
동향 및 분석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 준비)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OECD 농업정책과 무역 연구 동향 및 분석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 준비)

연구책임자

유병린(농업무역개발원장)

자문(가나다 순)

김대근(전 OECD 한국대표부 농무관, 전 농업위원회 부의장)

김승규(농업경제학박사, 경북대)

조규담(농업경제학박사, 전 OECD 한국대표부 농무관)

최형규(경영학박사, 목포대, 전 농림수산물부 기획관리실장)

본보고서는 2015년 OECD 농업정책과 무역 연구 동향 및 분석 용역의 한 부분인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 준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의제별 발언 참고 요지 등을 담고 있어 별책으로 편집을 하였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농업무역개발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 례

| | |
|---|-----|
| 1. OECD 농업장관회의 개요 | 1 |
| 1.1. OECD 농업장관회의의 목적과 역할 | 1 |
| 1.2. 한국의 OECD 가입 이후 농업장관회의 개최 실적 | 1 |
| 2. 과거 OECD 농업장관회의 분석 | 3 |
| 2.1. OECD 농업장관회의 개최경과 | 3 |
| 2.2. 제1차 OECD 농업장관회의(1992.3.26.~27) | 3 |
| 2.3. 제2차 OECD 농업장관회의(1998.3.5.~6) | 5 |
| 2.4. 2010 OECD 농업장관회의 | 9 |
| 3.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 준비 | 16 |
| 3.1. 회의개요(잠정) | 16 |
| 3.2. 회의 대비 쟁점 검토 | 19 |
| 3.3.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 | 81 |
| [참고] OECD 농업장관회의 관련 농업위원회 논의 결과 | 94 |
| [부록] 2010년 농업장관회의 배경문서 요지 및 검토 의견 | 104 |

표 목 차

| | |
|---|----|
| 표 1. OECD 농업장관회의 개최 내역 | 2 |
| 표 2. 2010 OECD 농업장관회의의 배경문서 내역 | 13 |
| 표 3. 1998년 및 2010년 농업장관회의 비교 | 14 |
| 표 4.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일정(잠정) | 16 |
| 표 5. 2016 농업장관회의 배경문서 및 자료표(Fact Sheets) 내역 | 18 |
| 표 6. G20 국가의 WTO 농업협상그룹 분포 | 49 |
| 표 7. 글로벌 이벤트와 농업 관련 논의 결과 | 50 |
| 표 8. 장기 글로벌 농업 변화 예측 내용 | 55 |
| 표 9. 장기적 농업 분야 도전 과제 | 55 |
| 표 10. 장기 농업 도전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 56 |
| 표 11. 주요 품목별 생산 전망 | 59 |
| 표 12. OECD 회원국의 WTO 농업 협상 그룹 분포도 | 60 |
| 표 13. GAF 논의 배경과 내용 | 61 |
| 표 14. 장관 커뮤니케 초안 요지(2016 .2, 현재) | 63 |
| 표 15. 장관 커뮤니케 초안에 대한 각국의 주요 의견(발취) | 66 |
| 표 16. 배경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제기 사항 반영 내역 | 74 |
| 표 17.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배경문서(1차)에 대한 주요국 의견 | 74 |
| 표 18. 장관회의 진행 단계별 준비 사항 | 82 |
| 표 19.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 정리 | 91 |
| 표 20. 교역이 식량안보의 4가지 측면에서 미치는 단기·중장기 효과 | 92 |

그림목차

| | | |
|-------|----------------------------|----|
| 그림 1. | 정책조합(policy mix)의 개념 | 86 |
|-------|----------------------------|----|

1. OECD 농업장관회의 개요

1.1. OECD 농업장관회의 목적과 역할

1.1.1. 목적

- 농업정책과 관련한 OECD 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5-7년 주기로 회원국의 농업 장관이 참석하는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농업장관회의는 OECD 회원국의 농업분야정책 경험을 상호 교환하여 OECD차원의 공동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정책협력 및 조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의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회원국에 권고해오고 있다.

1.1.2. 역할

- OECD 농업장관회의는 회원국 간 정책 경험 공유와 정보 교환은 물론 국제규범의 선행적 논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의결과는 농업과 관련된 국제규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
- 회의결과는 선언문(declaration), 권고문(recommendation) 및 원칙(principle) 등의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1.2. 한국의 OECD 가입 이후 농업장관회의 개최 실적

- OECD 농업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1998년과 2010년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2005년에는 농업장관회의 대신 농업분야 고위급 회의가 있었다.
 - 1998. 3. 5 ~ 6 : “농업정책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농업정책 개혁방향”
 - OECD 대표부 대사(구본영) 외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명수) 등 참석

2 2015 OECD 농업정책과 무역 연구 동향 및 분석

- 2005. 6 : OECD 농업장관회의 대체 성격의 농업분야 고위급(high level) 회의
 - 우리나라 대표로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유병린) 등이 참석
- 2010. 2. 25 ~ 26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 정책”
 -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유병린) 등 참석
 - 논의방식으로 Break-out Session¹⁾이 도입됨.

표 1. OECD 농업장관회의 개최 내역

| | 개최일시 | 수석대표 | 주요의제 |
|----|---------------|--|--|
| 1차 | 1998. 3.5-6 | OECD 대표부 대사 (구본영) 외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이명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주제는 “농업정책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농업정책 개혁방향”으로 대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87년 OECD 장관이사회에서 농업 분야에도 시장원리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정책개혁 원칙들이 채택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개혁 성과의 평가를 논의 - “향후 농업정책 개혁방향”에서는 보조금 및 무역장벽의 추가감소를 통한 농업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시장원리 확산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하고 아울러 구조개선, 농촌개발, 농업과 환경, 식량안보, UR 이후 생겨난 새로운 쟁점 등을 논의 |
| 2차 | 2010. 2.25-26 |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 (유병린)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주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1)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기회와 과제 - 주제2) 이에 대한 국가와 OECD의 역할 ○ 논의방식 : 회원국(30개)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주제1)에 대하여 기초연설을 통해 국별 입장을 밝히고 주제2)에 대하여 그룹별 토론으로 대안을 제시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을 위한 방안으로 ① 안전하고 충분한 식량공급 ② R&D투자 확대 ③ 농업/비농업, 도시/농촌의 균형개발을 강조 |

1) 참석자들이 소그룹으로 분산하여 동시에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자가 주제나 질문을 제기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형태이다.

2. 과거 OECD 농업장관회의 분석²⁾

2.1. OECD 농업장관회의 개최경과

- OECD의 농업장관회의는 농업정책 개혁, 다자간 무역협상, 농업환경, 녹색성장, 농촌개발 등 선진국 및 개도국의 농업 및 농식품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하여 왔다.
 - OECD 농업위원회는 세계농업 및 농산물무역 정책 개혁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농업정책 개혁 및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략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OECD 농업위원회의 작업 계획(work programme)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 및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 OECD 농업장관회의는 그 동안 세 차례(1992, 1998, 2010) 개최되었는데, 이 중 두 차례는 UR 협상의 중요한 단계와 시기적으로 연계되어 개최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 1992년 농업장관회의는 당초 설정했던 UR 협상의 타결시한(1990.12.31.)을 넘긴 후 1993년 본격적인 UR협상 추진 및 타결을 앞두고 개최되었으며 1998년 농업장관회의는 UR 추가협상 개시시한(2000.1.1.)을 1년여 앞두고 WTO 협상의 재개에 대한 회원국이 약속을 재확인하고 농업정책개혁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2. 제1차 OECD 농업장관회의 (1992.3.26.~27)

- 최초의 OECD 농업장관회의는 1990년 12월말까지 종결하기로 하였던 UR 협상이 미국과 EU간 이견으로 지연되던 상황에서 1992년 3월 26일 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
 - 의장은 스웨덴 농업장관 Olsson이었으며 Crean 호주 1차산업 및 에너지부 장관, MacSharry EC 농업 및 농촌 개발 책임자, Madigan 미국 농무성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 주요 의제는 농업정책 개혁, 구조 조정, 농업과 환경문제, 농촌개발, 비회원국의 개발(development) 등이었다.

2) 본 내용은 조규담 박사(전 OECD 한국대표부 농무관)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4 2015 OECD 농업정책과 무역 연구 동향 및 분석

- 농업정책 개혁

- 1987년 채택하고 이후 개최된 OECD 장관 이사회에서 재확인한 모든 농업 개혁원칙과 농업개혁의 장기적인 목적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 농업이 UR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농업부문 현안의 타결이 본질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1987년 합의한 농업개혁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 농업개혁으로 인한 여러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중요하며, 회원국의 농업정책변화의 모니터링, 중기 시장전망 분석, 소득정책을 포함한 정책의 국내적·국제적 의미 평가, 정책개혁의 실행 수단 및 방법의 분석 등에 관한 OECD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개혁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작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구조 조정

- 농업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의 왜곡 및 지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지향성의 확대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구조조정은 농식품부문과 전체경제에 혜택을 증가시키는 반면 농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수반하므로 농업개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농업활동, 비농업활동으로의 전환, 또는 기타 대안을 찾는 데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관련 정책을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 개혁의 지원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조치 등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에 관한 OECD의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농업 및 환경

- 농업과 임업, 농업과 환경간의 양방향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 및 임업부문은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준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 농업정책개혁은 환경에 유익할 수 있으며, 농업의사결정에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내부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환경장관들이 지적인 오염자부담의 원칙(PPP)이 가능한한 최대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농촌 개발

- 농촌개발은 농업정책을 포함한 통합적 농촌개발정책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책의 중점방향은 농업의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장기적 활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농촌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았다.

- 농업장관들은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개혁, 환경 및 농촌개발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비회원국의 개발
 -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업과제에 대한 비회원국과의 대화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비회원국 개발 및 OECD 회원국 나아가 세계시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의 심화를 제안하였다.

2.3. 제2차 OECD 농업장관회의 (1998.3.5.~6)

- 제2차 농업장관회의는 1998년 3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었다.
 - 의장은 네덜란드의 Mr. J. Van Aartsen 농업·자연 관리 및 수산장관이, 부의장은 호주의 J. Anderson 1차 산업 및 에너지 장관, 미국의 D. Glickman 농무성 장관, 일본 농림수산부 장관 Y. Shimamura, EC의 F. Fischler 농업 및 농촌개발 커미셔너가 맡았다.
- 1998년 농업장관회의에서는 1987년 농업개혁원칙을 재확인하고 UR농업협정문 제20조의 조건 등에 따라 개시될 예정인 WTO협상이 농업지지 및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중인 농업개혁 과정을 계속 진행시킬 것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³⁾
- 1998 농업장관회의에서는 농업정책개혁의 진전 상황 평가, 새로운 도전과 과제, 공동 목표, 정책 원칙과 실행기준 및 OECD 업무추진의 우선순위에 대해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UR 농업협정문 제20조는 개혁과정의 계속에 관한 WTO 회원국의 약속에 관한 조항으로 WTO 회원국은 지지 및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의 장기적인 목표를 계속 진행중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개혁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UR협정 이행기간(1995~2001) 만료 1년(2000.1.1.) 이전에 개시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동 조항은 협상을 개시함에 있어 회원국들은 UR 농업협정문의 감축약속 이행으로부터의 경험, 세계농업무역에 대한 감축약속의 효과, 비교역적 관심(NTC),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시스템의 설립목적, 협정문 서문에 언급한 기타 목적 및 관심사항,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약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2015 OECD 농업정책과 무역 연구 동향 및 분석

- 농업정책 개혁의 진전 평가

- 1987년 OECD 이사회에서 농업정책개혁의 원칙에 합의한 이후 농업정책개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일부 가격지지 정책은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가 적고 시장시그널이 영향을 더욱 많이 반영하거나 지지정책의 목적달성에 더 효율적인 직접 지불 및 기타 정책조치로 전화되었으나 여전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 OECD 국가들은 1992년 OECD 농업장관회의에서 확인했던 환경문제, 농촌 개발 및 구조조정 과제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들은 이 현안과제를 다루기 위한 농업정책 조치를 개발해 왔으며 농업정책개혁이 농식품 부문 전체에 미치는 충격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 1994년 UR 협정은 농업정책개혁의 도전에 중요한 단계(step)로서 농업무역 정책 및 관련 국내정책을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원칙제안에 포함시켰다. 국내 정책 및 무역정책 개혁의 노력은 1980년대 특징이었던 심각한 과잉공급의 축소,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 세계시장의 기능 활성화, 국내시장 및 세계시장 변화의 보다 긴밀한 관계형성에 기여하였다.
- 농업정책개혁의 진전은 국가 및 상품별로 균등하지 않으며 정책개혁의 속도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 농업무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수출보조 사용은 UR 농업협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쟁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농산물 수출신용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아직 없는 실정이고, 무역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SPS), 원산지증명, 품질표준, 수출입독점 또한 중요한 무역 정책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 농업무역정책조치는 국내 농업정책조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농업 장관들은 이들 정책의 개혁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새로운 도전과 과제

- 농업장관들은 OECD 사무국이 준비한 다음 보고서 및 제안된 정책접근방안을 정책개혁과정의 진전을 위한 토론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였음을 주목하였다.
- OECD 회원국의 농업 및 농식품부문의 주요 과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농업 및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농식품산업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충분하고 안전한 식량 공급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 농업장관들은 OECD가 세계식량의 안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으며 글로벌 식량 안보 및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식량안보는 기아의 근절, 충분한 식량생산,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세계무역시스템의 보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국가적·국제적인 노력을 포함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 BT 및 IT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보급은 농식품부문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고 있다.

- 공동 목표(Shared Goals)

- 농식품부문이 시장시그널에 반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문이 생산자의 생계수준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활력있고, 혁신적이도록 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문은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보다 더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과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을 충족시키면서도 충분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식품공급에의 접근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과 환경에 기여하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다원적 특성 및 투명한 정책을 활용하여 고용기회 창출 등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기여하고, 국가 및 전 세계 수준의 식량안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정책은 공동목표들을 통합적이고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목표지향적인 방식으로 분명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책원칙(Policy Principles)과 실행기준(Operational Criteria)

(정책원칙)

- UR 농업협정문 제20조에 대한 지지와 UR협정문의 이행기간 종료 1년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 로마선언에서 합의한 행동계획 및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실천계획을 통해 세계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 시장 상황에 대한 농업생산자들의 반응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촉진한다.
- 농업 및 농식품 부문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되, 특히 조건불리지역 등 영향을 받는 농업생산자의 필요를 고려한다.
- 효율적이고 목표가 잘 설정된 농업정책수단, 고용이전 촉진, 새로운 시장기회, 토지의 대체사용,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 제공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 및 농식품 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8 2015 OECD 농업정책과 무역 연구 동향 및 분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장려하고 농업의 환경 비용 및 환경편익을 농업생산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등 환경보호 및 농업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 국제 규범체계안에서 식품안전규정의 효과성 및 신뢰성 개선, 원산지 및 품질 표준 강화, 소비자에 대한 정보 내용 및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고려한다
- 공공 및 민간 R&D, 지적재산권 보호, 공공인프라, 정보, 자문 및 훈련 등을 통해 농식품 부문의 혁신, 경제적 효율성,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 영토간 불균형 해소, 자연자원의 지속적 관리 촉진, 다양한 농업개발전략 지원을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보존 및 강화한다.

(실행기준)

- 농업 장관들은 비용효과적인 정책조치들을 설계하고 이행함에 있어 이러한 정책 조치들이 설정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되어야 하며 또한 정책조치들을 강구함에 있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행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그 기준으로 투명성⁴⁾, 목표설정⁵⁾, 맞춤형⁶⁾, 유연성⁷⁾, 공정성⁸⁾을 제시하였다.
- OECD의 추진업무의 우선순위
- 공동목표, 정책원칙, 정책수단들의 실행기준에 대한 농업정책 변화 및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및 분석도구를 개발한다.
 - 주요 농업 시장과 무역의 개발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비회원국들의 시장개발과 변화를 고려한다.
 -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농업무역 및 범경계적인 정책이슈 및 영향을 검토하고, 농업무역 자유화의 과정에 대한 WTO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석적 지원을 한다.

4) 투명성 (transparent) : 누구나 정책목적, 비용, 편익 및 정책수혜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5) 목표설정(targeted) : 특정한(specified) 정책 효과(outcomes) 및 디커플링(decoupling)

6) 맞춤형(tailored) : 명확하게 정의한 정책효과의 성취에 필요한 수준보다 크지 않은 이전을 제공

7) 유연성(flexible) : 농업상황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정책목적 및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 가능하며, 특정 정책효과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

8) 공정성(equitable) : 산업부문, 농업생산자, 지역에 대한 지지의 분배효과를 고려

- 이와 관련하여 장관들은 OECD 위원회들이 현재의 업무계획하에서 다른 포럼들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면서도 WTO의 여러 위원회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정보교환과 분석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농식품부문의 구조조정, 농촌개발, 농가소득, 농장고용, 소득위험 관리,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에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및 새로운 정책접근방식을 강구하고 분석한다.
- 국내농업정책, 농업환경정책 및 무역조치들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측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농업생산 및 무역의 주요당사자인 비회원국과 적극적인 정책대화를 촉진한다.
- 농업인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소비자를 포함한 농식품부문 비정부기관 및, 환경관련 비정부기관 등과 대화체계를 개선한다.

2.4. 2010 OECD 농업장관회의

- 2010년 농업장관회의는 30개 OECD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⁹⁾의 농업장관과 EU, FAO 및 WTO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2월 25일에서 26일까지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1998년 이후 12년만에 개최된 농업장관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량과 농업정책-세계적인 도전과 과제에 대응」(Food and Agriculture Policies for a Sustainable Future: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이었다.
 - 오스트리아의 Nikolaus Berlakovich 장관과 뉴질랜드의 David Carter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 농업장관회의에는 당시 OECD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위원회 옵서버국(아르헨티나, 루마니아)이 참가하였다.
- 농업장관들은 지난 10년간이 식량 및 농업부문의 여건과 환경에 중대하고 끊임 없는 변화의 시기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및 세계의 영양부족인구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향후 경제적, 인구학적, 기술적, 시장 및 환경변화는 농업생산자, 식품산업, 소비자, 정부에게 새로운 도전 및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9)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 농업장관회의는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속가능한 토대위에서 증가하고 있는 세계인구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1998년 농업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정책원칙을 강화 및 보완하기로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OECD 농업위원회의 정책원칙, 업무추진지침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업무추진방향)

-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빈곤 감축 및 경제개발이 세계 식량불안 및 기아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지만, 국내생산, 국제무역, 재고, 빈곤층을 위한 안전망, 개발수준과 부존자원을 반영한 기타 조치들을 혼합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및 환경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 이 과정에서 농업은 개방된 시장이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술 및 혁신의 공유를 촉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이런 맥락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피하기 위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방출 축소, 탄소 격리 등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감에 있어 농업부문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장관들은 다음의 정책원칙을 제시하였다.

(정책원칙)

- 농업생산자와 식품공급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소비자 및 사회적 변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식품공급 및 유통경로를 따라 가격신호가 전달(transmission)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식량 및 농산물 시장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규제적, 정책적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 극심한 가격변동의 충격에 대응하여 농장, 농가단위 및 농식품 산업 전반 등에 걸쳐 위험관리를 돕는 적절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효율적인 책임 분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식량 및 농업부문 정책들은 일반거시경제, 무역, 산업, 환경 및 에너지, 소비자 및 사회정책 (건강 및 영양포함)과 일관성(coherence)이 있어야 하며 국가정책과 개발도상국의 지원노력간의 일관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 무역은 수입국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량공급원으로, 수출국들에게는 수출창구로서, 효율적이며 규정에 근거한 다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DDA(도하개발아젠다)의 균형적이며 포괄적인 완결은 이러한 다자무역시스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 정부정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농업생산자 및 기타 공급체인 참가자들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환경적 성과 개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식품 및 농업시스템의 자연자원(토지, 물 등)에 대한 압력에 대응, 식량공급체인의 손실과 폐기물 축소, 농촌경관·생물다양성·토지경관 및 토양생태계의 기능 유지 등 공공재 및 서비스 공급,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목적의 인센티브 또는 규제는 총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신흥 및 개도국 내에 국제적 합의 기준에 따라 특별히 외국직접투자 등 우호적인 투자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생산성 증가 및 효율성 향상,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개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축소를 위한 기술이전 등 혁신은 지적소유권의 균형적 보호, 신기술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도움이 되는 규제적 환경을 통해 증진되어야 한다.
- 소비자 보호는 국제협정에 일치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 및 사료안전기준의 추가적인 개발 및 실행을 통하여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책은 특정의 목적 또는 계획된 정책 수혜자와 명시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에 대한 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부문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제한하여야 하며, 목표와의 지속적인 연관성, 비용효과성 및 효율성을 갖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업무추진 지침)

- 농업장관들은 식량 및 농업 관련 OECD의 업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글로벌 경제개발 조성, 생활수준 향상,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모두에게 유익한 세계화의 실현 등 OECD의 전략적 목적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적 목적의 포괄적인 성격임을 고려하여 비회원국, G-20, WTO,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농업장관들은 최근의 변화에 따른 세계 농업 및 식량 시스템의 당면 현안 및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2015 OECD 농업정책과 무역 연구 동향 및 분석

-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식량안보 문제
- 사료 및 식량 수요 및 농업원재료의 비식용 사용의 급속한 증가
- 토지·물·기타 농업자원의 경쟁적 사용의 증가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 가격 불안정성
- 경제적 및 환경적 편익의 잠재력이 있는 녹색성장의 기회
- 농업생산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 식품관련 건강 및 안전문제
- 선진국 및 개도국의 혁신, 효율적인 자원이용 및 생산성 향상, 특히, 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등
- 식량과 원자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을 보장하는 무역의 본질적인 역할 등

(실천방안)

- 농업생산자와 농식품 부문이 자율적으로 도전에 대응할 분야와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구분한다.
- OECD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역량을 성장과 개발, 빈곤감축,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대위에 세계식량 안보 강화, 개도국 스스로 경험과 전문지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시스템의 영향 완화 및 기후변화의 충격에 대한 농업시스템의 적응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옵션과 시장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 기후변화가 농업과 농림업에 미칠 충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농업부문의 역할 및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 농업생산자, 농식품부문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농업의 공공 및 민간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사회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방안 및 시장접근방식을 강구한다.
- 시장의 기능을 분석하고 물리적 환경 및 시장 환경 변화가 농업 및 식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위험과 불안정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정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인, 시장 또는 공공적인 대응방안을 정의하고 시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산성 증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의 보장, 소비자 수요의 충족, 폐기물의 축소, 세계 식량 및 농업 시스템내의 혁신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 민간 및 공공과 민간 간의 실천방안을 강구한다.

- 수출입국의 입장에서 무역정책이 세계의 식량안보 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 조정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정책개혁과정의 모니터링 및 분석에 제도적인 측면과 관리방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 OECD 회원국과 OECD 협력 상대국들의 풍부한 경험한 활용하여, 가능한한 실질적이고 관련성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 정책대화 의장을 마련한다.
- 법규(code)·제도(scheme) 등의 기준 설정, 생물자원에 관한 협력연구프로그램(CRP)등과 관련된 기존의 활동들이 최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분석 및 자문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보장해야 한다.

○ 차기 농업장관회의 개최

- 2010년대 중반 이전에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OECD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 2010년 농업장관회의 배경문서¹⁰⁾

표 2. 2010 OECD 농업장관회의의 배경문서 내역

| | 제 목 |
|----|----------------------------|
| 1 |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침체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
| 2 |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 이용과 관리 |
| 3 | 향후 세계식량 수급 전망과 식량안보의 확보 방안 |
| 4 | 농가의 위험관리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 |
| 5 | 농가 및 농촌경제 |
| 6 | 농식품 무역 자유화 |
| 7 | 비관세 조치를 통한 후생증진 |
| 8 | 농업과 환경 |
| 9 | 농정개혁 |
| 10 | OECD 및 주요 신흥 경제국의 농업 정책 |
| 11 | 신흥국가 및 개도국의 영세농 문제 |
| 12 | 농업과 기후변화 |

10) 배경문서별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은 부록 참조

[참고] 1998년 및 2010년 농업장관회의 비교

표 3. 1998년 및 2010년 농업장관회의 비교

| | 1998 농업각료회의 | 2010 농업각료회의 |
|-------|--|---|
| 회의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일시: 1998.3.5~6 (OECD 본부) - 1992년 이후 6년만에 개최 ○ 회의 참석: 29개 회원국, 5개 옵서버 - 한국: 주OECD 대사(수석대표), 이명수 국제농업국장, 배중하 국제협력과장 등 6명 * '98.3.4 각료선언문 사전검토회의 ○ 의장: 네델란드 Van Aartsen 장관 - 99년말 개시되는 WTO 차기 협상을 앞두고 29개 회원국중 26개 회원국 장관들이 직접 참석, 높은 관심도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일시: 2010.2.24.~25 (OECD 본부) - 1998년 이후 12년만에 개최 ○ 회의참석: 30개 회원국, 10개 비회원국(가입협상진행 및 옵서버국), EU, WTO, FAO 대표 등 - 한국: 유병린 농업통상정책관(수석대표)등 대표단 5명 ○ 의장: 오스트리아 Nikolaus Berlakovich장관, 뉴질랜드의 David Carter 장관 공동 |
| 진행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3.5. D. Johnston OECD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세 차례 회의를 개최 - 3.5일 오전: 농업정책개혁성과 평가 * Agricultural Policy Reform : Stocktaking of Achievements. - 3.5일 오후: 향후 농업정책개혁방향 * Agricultural Policy : The Need for Further Reform. - 3.6일 오전 각료선언문 논의 및 오후 1시 각료선언문 채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25,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개회사(오후 14:30)에 이어 - Openning Session :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도전과 과제”에 대한 각료들의 인식과 대응을 발표 - 사무총장 주최 만찬(working dinner) : FAO, WTO, IPCC¹¹⁾ 등 국제기구 초청자 발언 및 장관들의 질의를 통해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 주요 도전과제를 토의 ○ 2.26 오전 : “세계 농식품 시스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정부 및 OECD의 역할”에 관한 5개 분임별 토론(break-out session)방식으로 진행 - Lunch Session에서 토론 결과 발표 - 15:30분 회의 종료, 기자회견(사무국), |

| | 1998 농업각료회의 | 2010 농업각료회의 |
|-------|--|--|
| 논의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농업정책개혁방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및 무역장벽의 추가 감소를 통한 농업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시장원리 확산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하고 아울러 구조조정, 농촌개발, 농어업과 환경, 식량안보, UR이후 발생한 쟁점 등 논의 ○ 농산물수출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은 “농업지지와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을 통한 시장지향성 증대 및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농업개혁의 장기적인 목표의 강력한 추구를 강조 ○ EU, 한국, 일본 등은 농업의 다원적기능, 농식량안보의 중요성, 융통성 등을 강조 ○ WTO 농업협정문 제20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타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공동목표 및 정책원칙 합의이후 과거 10년간 지속적인 농식품산업의 환경 변화, 식량안보,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최근 쟁점 및 동향 분석, 대응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불안(food insecurity)등 향후 20년간 농업과 식품분야가 당면하게 될 기회와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정책방향 모색 ○ 농산물수출국(미국, 캐나다등)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의 중요성을 동의하면서도, 대응방안으로 시장지향성 확대, 무역장벽제거, DDA 및 FTA 협상등의 활용을 강조 ○ 한국은 안전하고 충분한 식량공급, 농업분야 R&D 투자 확대, 지역개발을 통한 농업과 비농업, 도·농간 균형개발의 필요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다양한 형태의 농업공존이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함을 강조 |
| 회의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농업정책개혁 강화를 위하여 7개항의 공동목표(Shared Goals), 10개항의 정책원칙(Policy Principles, 및 정책실행기준(operational criteria) 합의 ○ OECD의 향후 역할(7개항)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농업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정책원칙 강화·보완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항의 정책원칙(Policy Principles) 합의 ○ OECD 농업위원회의 업무추진방향 결정 |
| 차기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급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대 중반 이전, 진전 상황 검토를 위한 OECD 농업각료회의 개최 |

3. 2016년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 준비

3.1. 회의개요(잠정)

- 일 시 : 2016. 4. 7 - 8 (2일간)
- 장 소 : 프랑스 파리
- 참 석 자 : 회원국 농업장관(또는 고위관료)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 회의성격
 - 회원국의 농업장관이 참석하는 OECD 농업분야 최상위 의사 결정 협의체
- 회의 진행 포맷
 - 절차적 면에서는 2010년 장관회의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음

표 6-4.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일정(잠정)

| 일시 | 시간 | 내용 | 비고 |
|------------|-------|---------------------------|--|
| 2016. 4. 7 | - | 기자단과 사전 미팅 | 의장단 |
| | 14:30 | 개막식 | 사무총장 및 공동의장 환영사 |
| | 15:00 | Session I | 전체회의 / Short Video |
| | 15:20 | Break-out Period | 5 Groups |
| | 17:00 | Reporting Plenary Session | 분임토의결과보고 |
| | 18:00 | Group Photo | 수석대표 |
| | 18:15 | 카테일 | 공동의장과 OECD주최 |
| | 19:30 | (Working) Dinner | OECD사무총장 주최 |
| 2016. 4. 8 | 09:30 | Session II | 전체회의 |
| | 09:50 | Break-out Period | 5 Groups |
| | 11:30 | Reporting Plenary Session | 분임토의결과보고 |
| | 12:30 | Working Lunch | 사무총장 주최 |
| | 14:30 | Closing Session | 의장요약보고서(Chair's Summary) ¹²⁾ 채택 |

12) 2010년의 경우 의장요약보고서는 의장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팩트의 정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등을 위한 토론을 배제함.

- OECD 농업장관회의에서 전체회의(Session I, II)는 형식적 성격이 강하고 분야별 Break-out Session(분임토의)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간결한 핵심위주의 대응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전체회의에서는 소수(a small number)의 장관이 발언할 예정이다.

Break-out Session(분임토의)¹³⁾

- 컨퍼런스에서 있는 회의방식의 한 종류로 세부적인 주제를 토의할 목적으로 참석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분산하여 토의하는 형태로 참석자들에게 적극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여러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
- 소규모 토의가 가질 수 있는ダイナミック한 의견과 정보교환을 통해 참석자들이 가진 새로운 생각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임.
- 진행자가 토의할 주제나 질문을 던지고 참석자들 중 한사람은 토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토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임.
- 컨퍼런스의 단조로움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시간제약으로 인해 결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진행자의 역할이나 참석자의 자세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음.
- 토의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중요하며 관심이 있고 잘 정리된 질문과 함께 분명하고 현실적인 목적이 효과적인 토의에 중요함.

13) www.businesspundit.com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표 5. 2016 농업장관회의 배경문서 및 자료표(Fact Sheets) 내역¹⁴⁾

| 구분 | 제목 | |
|------|----|----------------------------------|
| 배경문서 | 1 | 예측이 어려운 미래에 대비한 건강한 식품시스템의 수립 |
| | 2 | 농산물 시장과 가격 : 2025년까지 전망 |
| | 3 | 농업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¹⁵⁾ |
| | 4 | 농업과 기후변화 ¹⁶⁾ |
| | 5 | 농업용수 |
| | 6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증대 |
| | 7 | 기술혁신 |
| | 8 |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정책혼합의 보정 |
| | 9 | 농산물과 식품시장의 기능 강화 방안 |
| | 10 | 농식품시스템에서 성장과 경쟁을 위한 무역의 이익 |
| | 11 | 영농구조 : 경쟁력 강화와 전환기 관리 |
| | 12 | 농업 위험 관리 : 총체적 접근 ¹⁷⁾ |
| 자료표 | 1 | 21차 당사국총회(COP21) 이후의 농업 |
| | 2 | 나이로비 패키지가 농업협상에서 무엇을 시사하는가? |
| | 3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확대 : 농업 부문 시사점 |

14) 2016.1.26.일자 배경문서 및 자료표 기준임.

15) 문서의 제목이 「한눈으로 보는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ies at a Glance)」으로 변경되었음.(2016.2.18.)

16) 문서의 제목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친 기후 농업시스템(Towards Sustainable, Productivity and Climate-Friendly Agricultural System)」으로 변경되었음.(2016.2.18.)

17) 2016.2.25. 배포됨.

3.2. 회의 대비 쟁점 검토

3.2.1. 검토의 전제

- 주제인 『Better Policies to Achieves a Productive and Sustainable Global Food System』과 관련한 글로벌 현안과 질문(possible questions to guide the discussion)을 연계하여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배포했다.(2016. 2. 18 현재)
 - 정책조합(policy mix), 정책의 단기적 개입과 장기적 방향간의 균형, 일반적 정책과 특정 정책 개입간의 균형 등
 - 성공적인 정책 프로세스 변경의 교훈(lessons), 어려움(obstacles) 및 이해 관계자(stakeholders) 참여 등
- 사무국이 배포한 배경문서(background note)와 자료표(fact sheets), G20, UN/SDGs, COP21,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등 주요 글로벌 주요 이벤트에서 논의된 농업 관련 이슈 및 장기농업예측 내용 등을 분석하여 대응방안(talking points)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2. 배경문서 및 자료표(Fact Sheets)

- OECD 사무국은 논의쟁점과 관련하여 11개 주제의 배경문서(Background note)를 1차로 배포(2016.1.19.) 한데이어 2016.2.3.~4. 간 농업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배경문서를 배포(2016.2.18.)하고 그 이후(2016.2.25.) 1개를 추가로 배포하였다.
- 배경문서 및 자료표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Background notes]

1. 예측이 어려운 미래에 대비한 건강한 식품시스템의 수립
(Building Robust Food Systems for an Unpredictable Future)

| | | | | | |
|----------|----------|---|---------------------------------------|------------------------------------|------------------------------|
| 배경 문서 | 이슈 개요 | <p>○ 식품과 농업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이용면에서 경합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인구를 위한 농업생산이 늘어나야 하고 경제성장, 빈곤감축, 농촌발전과 고용에도 기여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 농민들은 기후변화의 예기치 않은 효과에 적응해야 하고 정책입안자와 업계의 선택은 식품과 농업이 이러한 제약요인(constraints)에 의해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 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pivotal)함. <p>○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분석은 모델 예측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내재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제공함. - OECD는 2050년까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3가지의 잠재적 시나리오를 발전시킴. | | | |
| | | 시나리오명 | Individual, Fossil Fuel-Driven Growth | Citizen-Driven, Sustainable Growth | Fast, Globally-driven Growth |
| | | 내용 | 개 별 국 가 단 위 로 성장, 환경적 고려 부족 | 시민사회 중심, 환경과 사회 보호 강조, 국제협력 제한적 | 경제성장 위한 국제협력에 초점, 환경이슈 고려 부족 |
| | | 분석결과 | 식량안보, 환경분야 취약 | 지속가능성 취약 | 기후변화 대응 제한 |
| | | <p>○ 시나리오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과 시나리오 간에는 수치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실질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 끝났다. - 농가 소득은 증가하지만 농업부문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는 끝났으며 식품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고 특히 화석연료기반 성장과 글로벌 성장 시나리오에서 특히 증가한다. | | | |

| | | |
|---|---------------------------------|---|
| | <p>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p> | <p>○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건강한 전략이 필요한 5가지 전략이 권고된다.</p> <p>① 지속가능한 생활과 소비 패턴으로 이행 : 보조금과 세금, 소비자 인식, 자발적 기준을 포함한 민간의 계획(initiatives)</p> <p>② 식품시장 규제의 연계성 강화 : 국제무역체제, 축산질병의 국가 간 이동관리, 기후방지 기반의 발전</p> <p>③ 지속적 생산성 향상 : 지속적 생산성 향상에 방해되는 정책의 재평가, 화석에너지 또는 다른 에너지 이용제도 포함 및 제대로 작동하는 농업혁신 시스템</p> <p>④ 인프라의 개선 : 시장효율 증가-농가의 소득증대와 낮은 소비자 가격</p> <p>⑤ 농업위험관리 시스템의 개선 : 공공과 개인의 책임 명확화에 의한 시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p> |
| <p>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p> | <p>검토 의견</p> | <p>○ 미래 식품시스템의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분석 내용임. - 다만, 분석시나리오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다소 어려운 점(Global 성장이 왜 기후변화대응에 취약한지 등) 점은 있음.</p> |
| | <p>대응 계획</p> | <p>○ 농업장관회의 발언 등 대응자료 작성 시 참고</p> |

[Background notes]

| 2. 농산물 시장과 가격 : 2025년까지 전망 (Agricultural markets and prices : Towards 2025) | |
|--|--|
| 배경 문서 | <p style="text-align: center;">이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농산물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높고 불안한 가격의 시기를 거쳐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농산물 시장은 작물과 축산물 가격이 유난히 높은 수준으로부터 반락하였던 2010년경에 비해서는 훨씬 조용함 ○ 농산물과 식량 수요는 세계경제 부진과 주식작물의 소비 등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라앉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인데, 개도국들의 인구와 소득 증대, 도시화 등으로 식량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나 경작지 증대는 여력이 없어 공급 증대는 주로 생산성 증대에 의할 것임 ○ 향후 10년간 식량과 농산물 가격은 실질적으로 미미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 보다는 높게 유지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육류와 유제품 가격이 작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작물 중에는 사료작물로 이용되는 잡곡과 유류작물 가격이 오를 것임 - 석유 가격의 하락은 식량가격을 낮출 것임 ○ 향후 10년에 걸쳐서 농산물 수출은 주요 수출국에 더욱 집중되는 반면, 수입국들은 더욱 분산될 것으로 전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국제시장의 위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시장의 유연한 기능을 확보해야하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장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무역협정의 중요성 ○ 혁신과 농업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은 식량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됨 ○ 개도국에 있어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와 소비자들의 낭비와 과잉소비를 줄이기 위한 보조는 식량안보를 향상시킬 것임 ○ 희귀한 자원, 특히 물은 지속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이 매겨져야 함 |

| | | |
|----------------------------------|----------|--|
| 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충분한 공급과 가격의 안정은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다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이 중요하다라는 점에는 이견 없음. - 기후변화 등을 제외하고는 각국의 정책적 요소, 즉 수출국들의 수출규제나 바이오 연료의 의무적 사용과 생산 지원 등이 가격 충격을 일으키는 요소라는데도 동의 가능 ○ 전세계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가격이 매우 탄력적임 ○ 세계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작물재배가 줄어들은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수출국가에 대한 의무, 즉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규율 등은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수자원에 대한 가격을 부과하는 문제는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타당하나 다양한 정치·경제적 변수가 내재된 사안임. |
| | 대응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대한 비용 부과 문제 대응(필요시) ○ 시장기능 확대를 위한 수입국과 수출국간 균형적 의무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필요시) |

[Background notes]

| 3. 농업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¹⁸⁾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 |
|--|---|
| 이슈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의제가 커버하고 있는 49개국은 2012-2014년동안 연간 평균 US\$ 601 billion (EUR 450 bil.)를 농업생산자에게 이전시켰음. 이는 농업총수입의 약 1/6이 생산자를 지지하는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 줌. ○ 생산자 지지 추정치(% PSE)는 1995-1997년동안 21%였으나, 2012-2014년동안 약 17%였음. 이중 약 2/3는 가격이나 생산 또는 투입재와 직접 관련된 시장을 가장 왜곡시키는 형태로 제공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OECD국가간에도 거의 체로에서 50%이상인 국가까지 다양. 생산연계 지지는 시장신호를 가릴 수 있고 경쟁에 해를 끼치며, 잠재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생산 시스템으로 흐를 우려가 있음. ○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들에 있어서 농업생산자에 대한 평균적 지지는 수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경제국들은 평균적으로 농업생산자에 대한 생산연계 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역사적으로 생산연계 지지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 배경 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가격 지지는 점차 줄여 중국에는 폐지 되어야 함. 투입재 보조는 특히 농업 생산자들을 도와주는데 비효율적인데 이는 보조의 상당한 부분이 농업 부분의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임. ○ 소득과 수입 안정화 조치의 설계는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함. 이러한 조치들은 비용부담은 많으나 납세자에게 미미한 혜택만을 줌. ○ 직접지불은 명확한 목표와 현안 문제에 잘 맞춤화 된다면 환경적인 혜택의 달성이나 농가 소득을 지지하는 특정 정책 분야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 ○ 비즈니스 지향적인 농업(business-oriented agricultural sector)을 위해 권능을 부여하는 환경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함. 동시에 자연환경에 대한 영농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은 시장 기반적인 해결책, 규제, 조세의 조합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함. |

| | | |
|----------------------------------|----------|---|
| 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p>○ UR이후 각국은 농업개혁을 단행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지지나 투입재 보조 등 보조금을 적극 감축하는 정책에 동참하여 옴.</p> <p>- 다만, 생산자지지 추정치(PSE)는 농산물 순수입국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출 외에 국내외 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시장가격 지지를 포함하는 것에 이견이 남아 있음.</p> <p>○ 우리나라는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가격지지는 줄이거나 없애고 그 대신 직접지불, 특히 생산중립적이거나 생산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직접지불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음.</p> <p>- 우리나라는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소득안정 직불제 확대, 공익적 환경 프로그램(환경 보존, 경관유지, 생물 다양성 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p> <p>- 다만, 농업 직불금 지급에 있어 행정비용의 최소화가 주요 관건임.</p> |
| | 대응 계획 | ○ 농업장관회의 발언 등 대응자료 작성 시 참고 |

18) 내용상 큰 차이는 없고 배경문서(2015.1.26.)의 제목이 「한눈으로 보는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ies at a Glance)」으로 변경(2016.2.18.)

[Background notes]

| 4. 농업과 기후변화 ¹⁹⁾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 | |
|--|-----------------------|---|
| 이슈 개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의 불확실한 영향은 농업부문이 직면한 생산위험을 증가시킴. - 기후변화는 작물과 축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넘어선 자원문제 예를 들면 물 부족, 오염, 지력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 농업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GHG) 방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7%는 농업활동에서 직접 방출되고 추가적인 7-14%는 토지사용 변화를 통해 방출 - 농지, 비료, 가축 분뇨에 의한 아산화질소와 반추동물의 트림, 방귀와 쌀 경작에 의한 메탄가스 등으로부터 야기(아산화질소와 메탄가스는 CO2보다 훨씬 높은 지구 온난화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
| 배경 문서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관행을 채택하기 위한 농업생산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국가적으로(at the national level)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환경정책의 조합(무역, 투자, 인프라, 교육 등)에서 보내오는 신호들이 농업 부문의 지속적이고 기후친화적인 목적과 일관성 있도록 확보해야 함 - 물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작목(water-intensive crop)을 보호하는 수입제한은 농민의 나쁜 선택(bad choice)을 더 나쁘게 함. - 농업 부문에서 지속적이지 않은 생산 시스템을 촉진하거나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과도한 보험 보조(over-subsidized insurance), 시장가격지지 등 정책들을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도록 줄여 나가야함. ○ 자원의 집약적 사용과 과잉 사용, 잠재적으로 폐가 되는 투입재 사용은 개혁되어야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결과에 기반한 농민들의 유인과 지식 이전에 중점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관행을 더욱 채택하는데 관건이 됨 |

| | | |
|----------------------------------|----------|---|
| 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는 폭우·폭설·폭염 등 빈발에 따른 농업재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병충해, 가축질병 증가로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위험을 상승시킴. 이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가격의 안정은 각국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사임.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적인 감축국가는 아니지만,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9년에 2020년의 배출 전망치 기준 대비 30% 감축한다는 자발적인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온실기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온실기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015년부터 시행 ○ 우리나라는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4-2020)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영농기반 구축(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물 집약적 사용 작물을 보호하는 수입제한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해당 작물의 수자원 확보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요소가 전적으로 무시된 의견임. |
| | 대응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농업위원회에서 기 문제(물집약적 사용 작물 관련)를 제기한바 있음. ○ 농업장관회의 발언 등 대응자료 작성 시 참고 |

19) 내용상 큰 차이는 없고 배경문서(2015.1.26.)의 제목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친 기후 농업 시스템(Towards Sustainable, Productivity and Climate-Friendly Agricultural System)」으로 변경(2016.2.18.)

[Background notes]

| 5. 농업용수 (Agriculture and water : Towards resilient, sustainable and productive systems) | |
|--|--|
| 배경 문서 | <p style="text-align: center;">의제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성에 위해가 되는 수자원의 양과 질의 문제가 증대되고 있음. ○ 농업은 수자원 사용에 있어 가장 비효율적 사용자이자 오염원이며 환경뿐만 아니라 농업 및 비농업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농업용수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질 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현재의 농업용수 관련 정책의 강화와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과 오염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의 폐지도 필요함. ○ 가뭄으로 농업용수의 부족이 가시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들은 농업용수 부족을 가속화시키고 비농업 부문과의 수자원 경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질도 악화되고 있음. ○ 농업 부문은 수자원에 의존하는 농업의 특성상 이러한 양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관개농업으로 인하여 수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 고갈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드러냄. ○ 농업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함.(예, 비료, 농약, 가축분뇨 유출 등)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수원지/국가 수준의 수자원 관리 정책 필요 ○ 농가 수준 : 수자원의 양과, 질, 위험 요소 등의 정보시스템 필요, 효율적이고 위험에 대처가능한 기술과 농법 장려, 환경비용의 내부화 방안 마련 ○ 수원지 수준 : 정보시스템, 수자원에 대한 재산권 정의, 시장원리로 가격과 수량 변동이 가능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력한 수자원 배분 체계 ○ 국가 수준 : 현재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기회비용까지 회수가능한 수준의 비용 책정하고 빈곤농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용지원, 기후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에 대비, 농업/에너지 보조금, 농업용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물 경작에 유리한 수입관세 등의 가격왜곡을 가져오는 비수자원 관련 농업정책 철폐,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장려하고 일부 지역의 감소된 단수는 수입물량으로 대체 |

| | | |
|---|------------------|---|
| <p>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p> | <p>검토 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양적/질적 문제가 농업 부문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농업 자체가 이에 대한 위협 요인이기도 한 상황 인식에 동의하나 대처 방안의 일부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수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부여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수자원에 대한 충분한 가격을 지불한 농업 활동이 장기적으로 외부효과를 줄이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져올 수 있지만, 타산업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 부문 전체의 수자원 자체가 불가능하여 국제적 수준의 식량 안보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다수의 개별 빈곤농가의 수자원비용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행정 비용이 늘어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물 집약적 사용 작물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나 시장개방도 효율적인 수자원사용 기술을 보유하거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생산을 집중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기후 변화나 이상 기후는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방식이 시장왜곡을 줄일 수는 있으나 오히려 이상기후로 인한 수자원과 관련된 위험이 주생산지로 집중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 분산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해당 작목이 가진 긍정적 측면도 동시에 언급될 필요가 있음. |
| | <p>대응 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집약적 사용 작물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은 삭제 필요 (농업위원회 회의 시 요청) ○ 농업장관회의 시에는 추가적 대응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배포안에서 삭제됨 |

[Background notes]

| 6.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증대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in agriculture : Trends and policy performance) | |
|---|----------|
| 배경 문서 | 이슈 개요 |

- 전세계적으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고 있고, OECD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FP) 성장이 관찰됨
-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식량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개도국에서는 생산성 증대가 지연되고 있고, 주요 농업생산국 일부는 생산성 감소가 발생함. 이는 지속불가능한 농법이 계속되고 있고,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반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임
-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 부문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농업정책이 필요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비용 문제만이 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유인책과 규제가 필요함
- 1990년 이래 총요소생산성성이 평균 1.7%에 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와 암모니아 배출을 줄여왔음
- 농업생산성은 전세계적으로는 양호하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가, 지역, 농작물 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미래의 식량 수요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전반적인 증가세는 신흥국가와 구소련연방 및 동유럽 국가의 양호한 발전에 기인하나, 아시아 일부국가, 아프리카에서는 성장세가 느려지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생산성 감소나 나타났으며,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주요 농업생산 국가에서도 이러한 생산성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주곡작물에 대한 느린 생산성 증대가 증가하는 식량수요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지속가능한 생산성에 대한 추세는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업은 수질악화와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지속불가능한 농법은 지력약화, 수자원 과다사용, 생물학적 다양성 저해 등의

| | | |
|----------------------------|---------------------|---|
| | | <p>부작용이 있음. 이러한 환경문제는 장기적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적절한 적응방안 부재시 기후변화는 농업생산성 약화를 가져올 것임. 또한 농업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해야할 상황임</p> |
| | <p>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과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정책수단을 폐기하고 불필요한 규제 제로 인한 부담 경감 필요 ○ 경제전반(투자, 금융, 혁신)의 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농업 투입/생산물 시장의 적절한 기능 축진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 유지 필요 ○ 교육, 훈련, 지도 등을 포함한 농업 혁신 시스템 개선 필요 ○ 관행농법에서 비용효율적인 결과중심적인 농법으로 전환 필요 ○ 미래의 정책 개발을 위해 농업생산성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안에 대한 투자 필요 |
| <p>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p> | <p>검토 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성의 지속적인 증대가 증가하는 식량수요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동의하나 정책 방향과 용어 사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무역을 포함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치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논리적 부연설명이 필요함. 다시 말해, 무역이나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정책 폐지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복수의 학술적 연구 및 실증적 증거가 필요함. 특히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용어 정의와도 관련이 있음. 동일한 단위면적에서 지속적인 농업생산량 증대를 “지속가능한(sustainable)” 생산성 증대로 정의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녹색성장모델의 연장선으로써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의 비일관적인 용어 사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용어 정립 필요. 또한 환경·웰빙 측면을 고려한 농업생산성의 최적점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생산성에 대한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투입/생산물 시장의 기능에 대한 강조가 일반적인 전후방 산업의 원활한 기능을 강조하는 것인지 모호하며, 다른 정책 방안들과 마찬가지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소득지지정책이 단위생산성은 낮추겠지만 조건불리지역에서도 농업을 영위할 수 있어 생산량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구조조정 저해가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에 부정적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언급된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절한 적응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 |
| <p>대응 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장관회의 발언 등 대응 자료 작성 시 참고 |

[Background notes]

| 7. 기술혁신 (Adapting innovation systems to new challenges) | | |
|--|----------|--|
| 배경 문서 | 이슈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은 지속적 농업생산성 증대의 핵심 요소임 ○ OECD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농업 R&D에 중요 역할을 해왔으나, 몇몇의 국가는 농업부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이나 1990년에 비해 적게 투자하고 있음 ○ 개도국의 R&D 집중도는 매우 낮고, AIS(농업혁신체계)가 비용 효율적으로 기술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식량안보 달성과 기후변화 극복에 어려움이 있음 ○ 국제적인 R&D 투자 증대와 협력, 정보 공유, 적절한 기술 보조 등을 위한 AIS 거버넌스 강화와 재원마련 및 협력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함 ○ 그러나 재원의 한계와 개별 국가의 연구 능력 한계는 AIS의 도전 과제임 ○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농업수출 국가들의 투자가 줄었지만 선진국의 공공 R&D 투자가 전통적으로 높고, 다른 많은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농업 R&D 투자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 ○ 공공부문에 의한 농업 R&D 투자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음. 민간투자와 민간-공공부문간 협력을 통한 투자가 늘고 있음. 지적재산권의 강화와 경쟁적인 재원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늘고 있음 ○ AIS의 경우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기술의 전파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기술의 직접 지도보다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역할 필요 |

| | | |
|---|---------------------------------|--|
| | <p>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투자 증대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 ○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기술혁신 동기부여를 줄이는 무역과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농업보조정책 감축 필요 ○ 장기적 전략 추구, 농업혁신 주체와 정책간의 긴밀한 협조, 공공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방안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 협력 부문과 파트너십 강화, 장기적 안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공 투자 집중,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한 민간 투자 증대, 적절한 재원조달 체계 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혁신자로서의 역할 명료화 ○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상담 방안과 적절한 훈련 기회 제공 방안 필요 ○ 국제적, 지역적, 국지적 연구네트워크 강화 |
| <p>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p> | <p>검토 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임에 동의함 ○ 특히 기술혁신과 이의 적용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효율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적재산권 확대를 통한 민간의 농업부문 R&D 투자가 단기적으로 기술접근성에 대한 차별성 증대와 중장기적으로 일부 국가와 기관에 대한 혁신 기술 편중으로 효율성은 증대되지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가 없는 국제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재원 마련의 경우 각 국가의 농업기술수준에 따라 수요기술수준의 편차가 고려되어야 하고, 조달가능한 공공부문의 재원 수준이 다르므로 인력의 투입이나 제3세계에 대한 혁신 기술 전파 등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모색 필요 |
| | <p>대응 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장관회의 시 발언 자료 등 작성에 참고 |

[Background notes]

| 8.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정책혼합의 보정 (Getting the policy mix right for global food security) | |
|---|--|
| 배경 문서 | <p style="text-align: center;">이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안보는 영양부족인구 비율이 1992년 이래 23%에서 13%로 현저히 향상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향상은 국가와 지역 간에 균등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가 취약한 지역중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65%가 집중 ○ 빈자들의 소득 향상은 세계 식량안보 달성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됨. 또한 소득 향상을 결과적으로 영양의 향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농업, 보건, 교육, 인프라에서부터 농촌개발, 무역, 사회 안전망과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이 요구됨. ○ 농업은 소비자에게 식량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잠재적인 식량안보에 취약한 농부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이중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부가 시장개입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가난한 생산자들은 식량의 순 구매자(net buyer)로서 식품가격의 상승은 농촌빈곤을 줄이는데 반함. ○ 많은 국가들이 식량불안 해소방법으로 시장개입을 추진하나, 지급률 제고 등의 정책은 결점(drawback)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08년 식량가격 급등 시, 정부개입이 식량가격 상승을 증폭시키는 결과에 기여함(특히 쌀)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즉각적인 구제방안과 소득 안전망 제공,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산의 증진과 같은 중기적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세계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세계 식량공급의 증대와 개도국에서의 가난과 저개발을 다루어야 함. ○ 농업정책은 시장개입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책보다는 환경 개선,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향상 촉진, 시장 개방,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

| | | |
|----------------------------------|----------|---|
| 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영양부족 인구의 상존은 내전 등 분쟁, 식량의 상업화, 기상이변과 식량 생산면적 감소, 식량수급의 불균형 등의 원인이 혼재 ○ 우리나라농정도 개별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의 빈곤에 따른 식량안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농산물 생산의욕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 | 대응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장관회의 시 관련 발언 작성에 참고 |

[Background notes]

| 9. 농산물과 식품시장의 기능 강화 방안 (Strengthening how agricultural and food markets function) | | |
|--|-----------------------|--|
| 배경 문서 | 이슈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농산물과 식품 시스템은 복잡함. 즉 가공과 소매단계에서의 높은 수준의 집중도, 공급망상의 수직통합과 계약, 식품 부문의 전체 가치에 대한 농업 부문의 낮은 기여도 등임. ○ 식품 시장은 생산자, 가공업자, 소매업자, 소비자간에 경쟁적이거나 공정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심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집중도 :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소매 4개기업의 집중도는 거의 80% - 불완전한 가격 전달 : 생산자 수준에서의 가격 상하변동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EU, 일본, 브라질, 미국 등 동일한 현상) - 총 식품소비 지출 중 농가의 몫이 떨어지고 있음.(식품 가격 중 농가의 몫은 20% 수준) - 그러나, 최근 OECD 분석은 이러한 세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동안에도 시장은 여전히 경쟁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가치사슬상의 가격 결정에 대한 투명성은 시장이 유연하고 경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됨. 최근의 가격 위기로 많은 국가들이 가격 자료의 수집과 분산에 투자를 촉진시켜옴.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공급망상의 가격 형성에 대한 향상된 가격데이터 등 정보는 각 주체들로 하여금 더욱 정보에 충실한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2008 식품위기 이후 관련 조치(initiatives)가 발전됨. ○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에 가격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initiatives)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케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경쟁당국이 개입하기 전에 시장지배적 관행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가격데이터는 정책당국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하나 가격데이터가 적정한지(referral)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 | |
|----------------------------------|----------|--|
| 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식품 시장의 공급망상에서 소매기업의 집중도 증가, 가격 전달체계의 불완전성, 소비자의 총식품 지출에서 농업 생산자가 차지하는 몫이 낮은 현상은 선진국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가격 전달체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i)당국에서 주요 식품만을 선별하여 소비자 지출액중 농가의 몫을 나타내는 Market Basket이나, (ii)소비자의 총체적인 식품 소비지출 중에서 농가의 몫을 나타내는 Marketing Bill을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임. ○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축산부문의 시장지배력 남용의 방지를 위한 “패커와 가축시장에 관한 법률(Packers and Stockyard Act)”과 거래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축거래정보의 보고 의무에 관한 법률(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임. |
| | 대응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장관회의 시 논의 및 발언 자료 작성 시 참고 |

[Background notes]

10. 농식품시스템에서 성장과 경쟁을 위한 무역의 이익
(Reaping the benefits of trade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farm and food systems)

| | | |
|----------|----------|--|
| 배경 문서 | 이슈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산은 아시아와 남미에서 가장 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성장한 무역 패턴에 반영됨. ○ 농업 및 식품 관세는 일반적으로 높이 유지되고, 일부 SPS와 TBT 조치가 보호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나타남. ○ 최근 수출제한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반면에 수출보조금과 같은 수출 조치의 사용은 낮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제10차 WTO 장관회의에서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합의 ○ 현재의 정책은 무역을 제한하고, 시장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글로벌 복지를 감소. ○ 정책은 생산과 무역 왜곡하는 지원에서 생산성, 지속성, 회복력을 다루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 농업 식품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농식품 전체의 경우, 무역에 대한 집중 현상이 줄어들었음. ○ 2008/09 식량 가격 위기에 대응하여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 등으로 생산외곡보조는 줄었지만, 다른 형태의 왜곡 지원은 상승했음. ○ 최근 OECD 의 작업 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일련의 농업 정책은 글로벌 농업 식품 교역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한 정책이 없다면 농업 무역은 5.3 % 증가할 것이며, 식품 무역 은 9.7 % 증가할 것임. - 많은 무역과 국내 지원 정책이 식량 생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들은 생산량 증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음. ○ 식량안보 등 무역제한정책은 제한적인 농민의 생활수준을 위한 제한된 무역 정책의 사용은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OECD 분석은 시사하고 있음. |
|----------|----------|--|

| | | |
|---|---------------------------------|--|
| | <p>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생산과 무역 왜곡 조치의 도입으로부터 탈피. ○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보편적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촉진 ○ 장기적인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 목적에 맞춰 사용 가능한 자원을 투자 ○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과 전후방산업의 발전 장애를 제거 ○ 완벽하고 신속한 무역 원활화 협정 이행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SPS 및 TBT 조치와 무역저해방지 ○ 일방적, 지역적, 다자적 프로세스를 통한 무역왜곡의 해소 |
| <p>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p> | <p>검토 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에 대한 집중 현상이 줄어든 세부내역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여 정확한 의미전달에 오해를 줄 우려가 있음.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집중현상은 심화된 반면 수입 집중현상은 낮아진(dispersed) 것으로 분석됨.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
| | <p>대응 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장관회의 시 논의 및 발언 자료 작성 시 참고 |

[Background notes]

| 11. 영농구조 : 경쟁력 강화와 전환기 관리 (Farm structures :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managing transitions)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의 영세농과 소수의 대농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2ha 미만의 소농임. ○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소농은 기술, 경영능력, 농업자원의 제한으로 저생산성을 겪고 있고 이는 빈곤과 식량안보의 위협요소임. ○ 확실화된 농정이 불가능하며 ① 농업생산성 증대, ② 농가소득원 다양화, ③ 이농 등의 다양한 농가 목표를 감안한 정책 수립 필요함. ○ 전세계적으로 85%의 농가가 2ha 미만 규모이며 전체 농지의 12%를 차지하고, 95% 농가가 5ha 미만의 규모이며 20%를 경작하는데 그침. ○ 소농의 경우 고정비용을 극복할만한 농외소득 등을 통한 농업소득원의 다원화방안 부재시 빈곤과 식량안보에 노출됨. ○ 소득 증대를 위한 증산정책은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늘리며, 장기적으로 효율적 농업의 장애물이 됨.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증대, 소득원 다양화, 이농 등의 선택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립 필요 ○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부문에 남게 될 농가에 대한 경쟁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수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선택 집중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도로, 전기 등의 인프라 조성, 농업/비농업 활동을 위한 교육, 생산조합 등의 기구 설립 |

| | | |
|---|------------------|---|
| <p>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p> | <p>검토 의견</p> | <p>○ 농가 지원을 위한 타겟형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함.</p> <p>- 그러나 지원대상의 구성을 단순히 농업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 기술, 교육수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성 있음.</p> <p>- 특히 영세고령농의 경우 농업이 경제적 기회가 가장 높아서가 아니라 다른 대안의 경제적 기회가 현저히 낮거나 존재하지 않아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다른 농가와 동일 정책의 수혜는 무의미함.</p> <p>○ 개도국의 영세농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국제농업협력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 농업자원 확충을 위한 원조가 필요함.</p> |
| | <p>대응 계획</p> | <p>○ 농업장관회의 시 논의 및 발언 자료 작성에 참고</p> |

[Background notes]

| 12. 농업 위험 관리 : 총체적 접근 (Agricultural Management : A holistic Approach)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은 소득의 등락을 가져오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어 있음. ○ 위험관리 정책은 가격이나 수확량 같은 하나의 요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재앙적(catastrophic), 즉 발생 빈도는 낮으나 많은 농민들에 큰 충격을 초래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책은 농민 스스로가 정상적인 경영의 위험에 대처(address)하려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보험수단 등 시장에 기반한 해결로부터 농민을 축출(crowd-out)해서는 안 됨.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을 3가지 계층(layer) 별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히 드물지만 재앙적 사건 - 정상적 사건과 재앙적 사건의 중간 - 정상적 사건 ○ 정부는 큰 피해에 중점(focus) ○ 위험관리는 농민들이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려는 노력과 위험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 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상황이나 농가의 규모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 개념임. |
| | 대응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동의 가능한 내용임 ○ 논의 과정에서 각국의 농업 상황에 차이가 있어 피해규모에 대한 확일적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필요시 발언) |

[Fact Sheets]

| 1. 21차 당사국총회(COP21) 이후의 농업 (What next for food and agriculture post-COP21?) | | |
|--|---|--|
|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채택.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 협상 참조) | |
| 주요 내용 | <p style="text-align: center;">파리 협정과 농업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인권, 개발, 성평등, 에코시스템 등 농업 관련 키워드를 협정 전문에 포함(예 : 식량 생산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적응 방안 강화 필요)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각국이 관리할 배출원 결정권 부여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선진국의 1000억 USD 공공펀딩 목표 제시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필요 | |
| 국가별 기여공약(IND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3개국의 기여공약을 분석한 결과 농업부문의 적응방안이 102개국에 포함되어 있고, 103개국에서는 농업 부분 감축 목표를 제시 ○ 농업용수 관련 기여공약 83개국, 산림 관련 기여공약 153개국 ○ 식품산업 관련 명시적 기여공약은 없으나 농식품 푸드체인 관련 중소기업(SME)의 기여 포함 | |

| | | |
|---|-----------------------------------|---|
| | <p>리마-파리 행동 의제 (LPAA)</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C 지지를 위한 LPAA에 대한 이해가 COP21의 중요 사항임 ○ LPAA는 180개국의 75개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예 : 농업부문-4/1000 Initiative, 산림부문-Landscape Restoration Initiative)와 개별 7000여 기관이 농업 및 식량(5개 부문), 산림 보호(6개 부문) 등에 대한 현안과 계획을 조명하였음 |
| | <p>결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21의 농업에 대한 체감적인 영향력은 현재 미미하지만, 기후변화 관련 농업 부문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향후 농업 부문의 역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 |
| | <p>향후 일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공식 발효 ○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 ○ 국가별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 ○ 첫 번째 이행점검은 2023년 실시 |
| <p>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p> | <p>검토 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제출한 INDC대로 2030년 기준 온실가스배출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우려와 긍정적 기대가 공존하고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농업은 2013년 기준 약 2천만 톤의 온실가스(CO2 eq.)를 배출하고, 벼농사가 약 1/3 정도를 차지함. 또한 시설농업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약 15% 증가하는 추세임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 개선 및 R&D가 진행 중임 ○ 타 산업부문과의 협력하에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과 감축량 계측 방안 등의 R&D 요구됨 |
| | <p>대응 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관련 논의 시 활용 |

[Fact Sheets]

| 2. 나이로비 패키지가 농업협상에서 무엇을 시사하는가? (What does the Nairobi Package imply for Agriculture?) | | |
|--|------------------|---|
| 주요 내용 | 서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 철폐를 포함, SSM, 면화, 원산지별 특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등 다수의 농업 관련 내용을 포함. ○ DDA의 미래에 대해 논의함. |
| | 농업 협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은 2020년까지 수출보조 철폐(낙농, 가공, 돼지고기 제외) ○ 개도국은 2018년까지 폐지(단, 마케팅 및 수출비 보조는 2023년 까지)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의 항구적 해결 방안을 마련을 확인함. ○ LDC 면화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폐지(선진국 : 즉시, 개도국 : 2017.1.1.)하고 무관세 무쿼터 제공(2016.1.1.부터) ○ SSM에 대한 추가적 협상 |
| | LDC 원산지 특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DC 국가산 원료가 75% 이상인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 기간 연장 |
| | DD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 이슈(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에 대한 진전을 위한 약속과 함께 도하의 미래에 대한 접근 시각에는 차이를 인식함. |
| 2016 OECD 농업장 관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10(나이로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임 |
| | 대응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논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Fact Sheets]

|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확대 : 농업 부문 시사점 (Sizing up the SDGs : what is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agriculture?) | | |
|---|-----------------------------|--|
| 주요 내용 |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월 1일부터 향후 15년간 2030년까지 이행할 169개 목표 ○ 두 번째 목표(Goal 2 :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와 첫 번째 목표(Goal 1 :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모두 농업과 깊은 관련 있음 ○ 2050년 90억 인류의 식량 제공과 절대 빈곤과 기아퇴치를 위해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한 사람들의 78%가 삶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음. |
| | 세부 목표와 농업 관련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의 세부 목표(Goals)를 제시²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곤 종식 (No poverty) : 절대빈곤(하루 1.25 USD 미만의 수입)퇴치와 빈곤층 50% 감소 2)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Zero hunger) : 기아 종식, 소농의 농업생산성 및 수입 2배 달성, 무역왜곡금지, 농업연구·훈련·기술 투자확대,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체계 구축 3) 보건과 복지(Good health and well-being) : 화학물질(농약, 비료등) 노출, 대기오염, 수자원오염, 토양오염 등에 의한 질병 사망 경감 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 농업인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 가능한 교육 훈련 5) 성평등 달성(Gender equality) : 토지소유와 관련한 성평등, 개도국의 성별 생산성 차이 감소를 통해 총농업생산물 2.5-4% 증대, 기아인구 12-17% 감소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확립(Clean water and sanitation) : 농업용수 효율적 사용. 농업은 전세계적으로 70%의 담수 사용중이며 과도한 비료, 살충제 등으로 수자원 오염 시키고 있음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농업용 에너지효율성 증대, 바이오에너지 생산 |

| | | |
|--------------------------|--------------|--|
| | | <p>8)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자원 사용 효율성 증대, 금융서비스 및 보험 제공</p> <p>9) 건설한 인프라 구축, 산업화 진흥 및 혁신(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구조 개발, 농식품 푸드체인 관련 중소기업(SME)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보험 제공과 가치 사슬로의 통합, 혁신 독려</p> <p>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Reduced inequality) : 하위 40% 소득 인구에 대한 평균 이상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방안</p> <p>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수확후 손실 감소, 자원의 효율적 사용, 친환경적 화학물질 관리 및 폐기, 화석연료 보조 감축</p> <p>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Climate action)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1000억 USD)</p> <p>14)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Life below water) :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 감축, 지속가능한 어획, 특정 조업보조금 금지</p> <p>15) 육지생태계 보호 및 복구(Life on land) : 담수 생태계 및 산림 보존, 사막화 및 지력 증진 회복, 생물학적 다양성 저해 대비, 농업이 토지 사용을 많이 하므로 상호간 관련성 높음</p> <p>17) 지속가능발전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Partnerships for the goals) : 시장개방 확대, 상호 비차별적 무역 시스템, 도하 라운드 결정 사항 준수 등 국제 무역 관련</p> |
| <p>2016 OECD 농업장 관회의</p> | <p>검토 의견</p> | <p>○ UN SDG는 농업 관련성이 매우 높으나 목표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한 적절한 토론이 필요.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농업 연료 등 보조금 지원이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책, 무역 관련 보조 정책의 정당성이 존재.</p> |
| <p>대응</p> | <p>대응 계획</p> | <p>○ 관련 논의 시 발언 자료 작성 등에 참고</p> |

20) 11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 16번째 목표는 평화, 정의와 제도(institute) 관련 내용이다

3.2.3. 2010 이후 글로벌 이벤트 분석

- 2010년 2월 OECD 농업장관회의 이후 글로벌 이벤트는 다수 있었으나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WFS(World Food Summits), G20 농업장관회의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G20는 WTO 가입국을 기준으로 161개국 중 20개국에 불과하나 세계 경제의 85%, 농업생산의 75%, 세계 인구의 2/3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구성이 선진국과 개도국은 물론, 수입국과 수출국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어떤 협의체보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G20 국가의 WTO 농업협상그룹 분포

| | WTO 농업 협상 그룹 | | | | | | | 계 |
|------------|--------------|-----------------------|-----------------------------|-------------------------------|----------------------------|----|-------------|----|
| | G10 | G20 | G33 | 케언즈 | EU | 미국 | 기타 | |
| G7 | 일본 | | | 캐나다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미국 | | 7 |
| 아시아, 중동 | 한국 | 중국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 | | | 사우디아 라비아 | 5 |
| 중남미 |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 | (아르헨 티나, (브라질, (멕시코) | | | | 3 |
| 유럽 | | | 터키 | | EU 의장국 | | 러시아 | 3 |
| 오세아니아 | | | | 호주 | | | | 1 |
| 아프리카 | | 남아공 | | (남아공) | | | | 1 |
| 계 | 2 | 5 | 3 | 2 | 5 | 1 | 2 | 20 |

○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농업 관련 논의 내용²¹⁾

표 7. 글로벌 이벤트와 농업 관련 논의 결과

| | 장소 (일시) | 농업 및 무역 관련 논의 내용 |
|---------------|------------------------------------|--|
| G20 정상회의 | 토론토/ 캐나다 (2010.6.26.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및 투자 분야에 새로운 장벽을 (2013년까지 3년간) 도입하지 않기로 함 ○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재확인 및 미 참여국에 대한 참여 촉구 |
| G20 정상회의 | 서울 (2010.11.11.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이 중요한 기회(a critical window of opportunity)임을 감안, 막바지 협상(end game)의 필요성 - 보호무역주의 동결 공약 재확인 ○ 다년간 행동계획(Multi- Year Action Plan) 채택 |
| G20 농업장관회의 | 파리/ 프랑스 (2011.6.22.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정상회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1차 상품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의제로 설정함에 따른 회의로 개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식량 가격 변동성에 관한 G20 행동 계획」을 채택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연구 강화 - 농산물시장 정보시스템(AMIS) 창설과 신속대응포럼(RRF) 창설 합의 - 인도적 목적 식량구매에 대한 수출규제 금지 등 국제 공조 강화 - 농산물 파생 금융상품 시장 규제강화 |

21) G20 합의문 및 외교부(www.mofa.go.kr) 등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발췌하여 정리 하였다.

| | 장소 (일시) | 농업 및 무역 관련 논의 내용 |
|-------------|-------------------------------------|--|
| G20 정상회의 | 간느/ 프랑스 (2011.11.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연구와 혁신을 강화하고 글로벌한 농업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서비스, 기반시설, 생산설비, 시장접근, 수확전후의 손실감소 등에 집중하고 농업과관련 분야(항만, 도로 등)에도 투자 촉구 ○ 기후변화에 적응, 온실가스 감축, 식량안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투자의 증대 필요성을 강조 ○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설립 ○ FAO의 개혁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 ○ 예측 가능하고 왜곡이 없는 투명한 교역 시스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러시아의WTO 가입 노력을 환영 ○ 인도주의적 목적의 식량구매에는 수출규제조치(수출금지, 수출 물량 제한, 과도한 수출세 부과)를 금지 ○ 바이오 에너지와 식량안보의 균형 |
| G20 정상회의 | Loscabos/ 멕시코 (2012.6.18.-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시장가격의 변동성과 농업에 관한 행동 계획(The Action Plan on Food Price Volatility and Agriculture)을 확인 ○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공약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새로 도입된 무역제한조치의 원상회복(roll back) 약속 ○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무역원활화 등 진전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성과 달성 노력 ○ 과도한 원자재 가격변동성의 축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간느 G20 농업행동계획 이행 점검 등 |

| | 장소 (일시) | 농업 및 무역 관련 논의 내용 |
|------------|-------------------------------------|---|
| G20 정상회의 | 상트페테부르크/ 러시아 (2013.9.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개발의제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행동계획 (Development Outlook)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금융소외계층포용/국제송금, 국내재원조성 5개 분야 ○ 제9차 WTO 장관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분야의 조기수확성(early harvest)과 도출 촉구 |
| G20 정상회의 | Brisbane/ 호주 (2014.11.15.-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축소와 개도국 발전을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이고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G20 식량안보 및 영양 프레임워크(food security and nutrition framework) 강화 ○ 식량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 소득과 양질의 일거리(quality job) 확대 ○ UN의 post-2015 발전 어젠다를 지지 |
| G20 농업장관회의 | 이스탄불/ 터키 (2015.5.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낭비(food waste)에 대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인구 : 8억 명 - 비만인구 : 6억 명 - 13억 톤의 식량이 매년 낭비됨 |
| G20 정상회의 | 안탈리아/ 터키 (2015.11.15.-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및 철폐 약속을 재확인하고, 양자 및 메가 FTA의 다자무역체제 기여 노력 합의,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s) 참여 촉진 정책 지지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 클린에너지기술 분야 투자증진, 에너지 관련 R&D 중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기후총회(COP21)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 |

| | 장소 (일시) | 농업 및 무역 관련 논의 내용 |
|-------|--------------------------------------|--|
| COP21 | 파리/ 프랑스 (2015.11.30 -12.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 ○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 합의 ○ 55개 국가, 글로벌 배출량의 55% 이상 비준시 발효 ○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 신설 ○ 교토의정서 비준 촉구(우리나라는 '15.5월 비준) |
| WFS | 1974 (로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S(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관련 정책의 검토를 위한 UN포럼으로서 정 부간 협의 기구 |
| | 2009.11 (로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안보 정상 선언에서 5가지 로마원칙을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자원과 활용을 위한 국가 계획에의 신투자 ii) 전략적 조정 기능 강화 iii) 포괄적이고 2 단계 접근(twin track) iv) 다자체제 역할을 확인 v) 농업식량안보 및 영양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확인 |
| | 2014.10.15. (로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Food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지침(voluntary and non-binding) |

| | 장소 (일시) | 농업 및 무역 관련 논의 내용 |
|--------------|-------------------------------------|---|
| SDG | 2015.9.25. (U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의에서 지속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를 채택 - 17개의 목표를 설정 |
| WTO/ MC10 | 2015.12.15. -18 (케냐, 나이로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모든 수출보조 철폐 - 개도국은 2023년 말까지 수출물류비 지급 가능 - 면화 수출보조는 조기 철폐(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2017년 초까지 철폐) ○ 수출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은 2018년, 개도국은 2021년부터 상환기간을 최장 18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으며, 장기적 운영비와 손실을 충당 가능하도록 적정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해야 함 ○ 수출국영무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기업의 수출독점력이 무역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타국의 수출을 대체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해외 식량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원조는 명백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무상원조 및 현금원조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수혜국 및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현금화가 요구되는 상황에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사전적으로 시장 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 투명성(부속서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해외식량원조 관련 정보의 연례적 통보 의무 |

3.2.4. 장기 글로벌 농업 변화 예측 연구(Foresight Exercise)²²⁾

- 장기 글로벌 농업 변화 예측 연구 결과에 의한 농산물의 수요, 공급, 환경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장기 글로벌 농업 변화 예측 내용

| | |
|----|---|
|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구(전망) : (2011)70억 → (2030)80억 → (2050)90억 ○ 다양한 고품질의 식품 수요 증가 |
|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요소 간 경쟁 심화 : 토지, 물, 에너지 ○ 기후변화 영향이 증가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이 필요 |
|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시스템이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 및 정치적 환경에 노출됨 |

- 5가지 도전 과제(challenges)는 <표 9.>와 같다.

표 9. 장기적 농업 분야 도전 과제

| | |
|------------|---|
| 기아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30억 명이 식품공급체인에서 부적정(suboptimal)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억 : 기아(hunger) - 10억 : 영양 부족 등(hidden hunger) - 10억 이상 : 비만(과소비) |
| 식품생산의 비지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식품 생산 환경과 능력이 낮아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침식으로 인하 유실(soil loss due to erosion) - 토양의 영양분 유실(loss of soil fertility)과 염분화(salination) 등 - 과잉어획(over-fishing) - 화석연료(fossil fuel) 의존 : 비료, 농약 등 |

22) The Future of Food and Farming(2011), Executive Summary, The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London의 토대로 필자가 정리하였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동인(drivers of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인구는 2050년까지 2배 수준인 20억 명으로 증가 • 도시인구의 증가 • 중·저소득(middle- and low- income)국가에서 인구증가 - 1인당 식품 수요의 양(size)과 질(nature) 변화 |
| 식품시스템 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market) ○ 새로운 식품강국(food superpowers) :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 세계 식품시스템의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제도적 구조 (internat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
| 기후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도상승과 강우패턴의 변화 ○ 이상기후의 빈도가 많아지고 생산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 ○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증산이 필요 |
| 주요자원 (토지, 에너지, 수자원 등) 간 경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생산을 위한 토지 ○ 글로벌 에너지 수요 ○ 글로벌 물(water) 수요 |

○ 장기 농업 변화 예측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은 <표 10.>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10. 장기 농업 도전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 | |
|-----------------|--|
| 식량공급과 수요의 균형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 식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보다 40% 증산 가능 : 아프리카 2-3배, 러시아 2배 등 - 농촌지도, 시장기능의 확대, 토지 등 자연자원의 권리체계 강화 등 ○ 새로운 과학기술의 활용 ○ 식품낭비의 축소 ○ 식품시스템의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수출제한 금지 등 - 식품 가격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농촌에 환경재(environmental goods) 공급 - 농업의 지속성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WTO 등 규범에 반영 ○ 수요관리를 위한 식품소비의 변화 유도(changing diet) |
|-----------------|--|

| | |
|--|---|
| <p>식품시스템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대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년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관심이 줄어들음. (2007-2008 제외) ○ 변동성의 수용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변동성의 부정적 요인을 줄여야함. - 가격변동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 <p>기아해소 (Ending hunger)</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생산이 식품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함. ○ 농업발전이 기아 축소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필요 ○ 기아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기반(constituency)이 필요 |
| <p>온실가스 감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이 온실가스 발생에 12-14% 차지 ○ 저탄소 농업시스템을 위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제도 - 의무규정 - 소비자 선택을 통한 전략 - 자발적 기준 등 ○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 |
| <p>생물다양성과 환경서비스 유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성은 식량안보 없이는 추구될 수 없음. ○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보상 (reward) 메카니즘이 필요 ○ 환경보호를 위한 지불은 농산물 시장 왜곡이 없는 방식이며 동 시에 농촌소득의 수단이 된다. |

3.2.5. OECD-FAO 농업 중기 전망²³⁾

가. 거시 경제 전망

- 세계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낮아질 전망이며 이러한 증가율 감소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 아프리카 지역은 지난 10년(2005-2014) 보다는 낮으나 연평균 2.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평균 물가상승율은 다음 10년간 2%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7년 (2000-2007)간 3%를 넘는 성장률 보다는 1%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10년 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나. 농산물 수요 및 공급 전망

- 개도국에 의한 농산물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 인구증가, 1인당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육류로의 소비패턴 변화
 - 도시화 등
- 바이오 연료 수요는 정체되고 사료용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 2004-2014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석유 가격의 하락이 바이오 원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곡물 수요는 증가 수요의 36% 정도를 차지하는 사료용 수요 증가로 늘어날 것이다.
 - 개도국에서는 곡물 수요의 60%가 식량이고 선진국의 경우 10% 정도만이 식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 농산물 증산은 주로 재배 면적 증가보다는 단수 증가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남미 등 일부 지역은 단수 향상과 함께 재배면적 증가도 기대 된다
- 농산물 수출은 일부 국가에 의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며 반면 수입은 분산되어 자연재해, 무역장벽 등 시장 위험은 증대될 전망이다.

23)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5-2024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

다. 주요 품목별 생산 전망²⁴⁾

표 11. 주요 품목별 생산 전망

| | |
|-------|--|
| 곡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에 생산이 기준기간(2012-14)에 비해 14% 증가할 전망 ○ 면적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나 단수 증가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유지작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2012-2014 간 3.5%에 비해 낮은 1.6% 증가 예상 |
| 설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에서 높은 수요 증가로 가격회복이 예상 ○ 시장은 설탕과 브라질에서 에탄올의 이윤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아시아 국가의 설탕생산으로 가격 변동성은 존재함. |
| 육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년간 가금육과 돼지고기 중심으로 20% 증가 ○ 2015-2012 기간 중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2024년에는 기준기간(2014-14)에 비해 17% 증가할 전망 |
| 낙농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생산은 2024년 까지 23% 증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율은 다소 낮을 전망(1.9→1.8%) ○ 개도국에서 1인당 소비는 식품소비의 세계화와 소득증가에 따라 1.4~2.0% 수준으로 증가 전망 ○ 수출 집중은 4개국(뉴질랜드, EU, 미국, 호주)으로 심화될 전망 |
| 수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은 2024년까지 20% 증가 전망 ○ 생산증가는 주로 양식어업(aquaculture)에 의한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에는 양식어업량이 어획량(capture)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양식어업은 2029년까지 38% 늘어난 전망 |
| 바이오연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생산은 느리게 늘어날 전망 ○ 석유가격 하락으로 교역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
| 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화가격(실질가격)은 중국의 재고로 단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최대 소비(2008-11)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24) 증가는 기준기간(2012-2014)에 대비한 수치임

3.2.6. 농업분야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OECD 국가 입장 분석

- 회원국(34개국)의 분포를 WTO 농업 협상 그룹으로 구분해 보면 국가 수로는 농산물 수입국이 다수이나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 OECD는 회원국의 고유한 입장과 함께 글로벌 규범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협의체로서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OECD 회원국의 WTO 농업 협상 그룹 분포도

| WTO 협상그룹 | 국가명 | 국가수 |
|----------|--|---------|
| G10 |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 6 |
| G20 | 칠레, 멕시코, | 2 |
| G33 | 한국, 터키 | 1(한국제외) |
| 케언즈 |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 3(칠레제외) |
|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21 |
| 미국 | | 1 |
| 계 | | 34 |

3.2.7. 글로벌 농업 포럼(GAF)에서의 논의 동향 분석

가. 포럼개요

- 일시 : 2016. 2. 1
- 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 참석 : OECD 회원국, 국제기구, 초청 비회원국 등
- 형식 : Seminar(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
- 의미
 -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농업위원회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됨.

나. 주요내용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제10차 WTO 장관회의와 농업분야간의 관계, 농식품 분야 위기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향상 방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있었음.
- 주요 정책 방향으로 수자원 관리 강화, 농지·산림의 탄소저장 기능 확대, 식량안보 해소, 비관세장벽 완화, 위험관리 개선, 과학적 증거(측정 등)에 기초한 정책 추진 등이 제시되었고,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OECD 농업분야 업무방향 설정에 참고하기로 함.
- 다만, WTO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무역왜곡적 요소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과 시장 활성화에 앞서 소규모 저소득층 생산자 및 수입국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었음.

표 6-13. GAF 논의 배경과 내용²⁵⁾

| | 배경 | 논의내용 |
|-------------------------------|--|--|
| UNSDGs (FA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식품은 UNSDG 관심의 중심임. ○ 2030년까지 기아(hunger) 타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농촌에서 빈곤 해결이 필수적 ○ 이를 위한 우선적 정책(priority policy)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SDG에 포함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의 연관성을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여러 문제는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토론자들은 정책혼합(policy mix) 관련 주체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다수의 참여자가 물 이용과 관련한 관심을 표명하고 OECD는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함. |
| Climate change (프랑스 농업식품 산림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 이전보다 2°C 이하로 관리 - 현재보다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 분야의 중요성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COP21에서 도출된 파리협정 및 4%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함.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농업분야의 역할을 강조함. |

25) ()는 발표자가 소속된 기관임

| | 배경 | 논의내용 |
|-----------------------------------|--|--|
| | 응을 위한 정책(policy initiatives)에 대해 논의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함. |
| 농산물 국제무역 (WTO) | ○ MC10에서 수출 보호 철폐에 합의 했지만 미해결된 문제가 많음. ○ 농업의 국제시장과의 통합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발이 발전, 성장, 식량안보에 기여한다는데 광범위한(wide spread) 인식이 있음. - 다자 차원의 합의가 극히(extremely) 어려움 | ○ RT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MC10에서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두 시스템간 조화의 필요성을 언급함. ○ RTA가 궁극적으로 다자 교역 시스템의 성과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식량수출국의 수출금지 정책 등 국제 무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지적됨 ○ 우리나라는 각국의 상황에 차이가 있으며 다자간 합의를 위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 |
|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과 소비 (IFPRI) | ○ 예측이 어려운 상황적 전개에 대응한 정책 시스템 -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응 가능한 시장, 무역 및 제도가 중요 ○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논의됨. - 식품낭비 감소의 중요성이 대두 ○ 예측이 어려운 상황적 전개에 대응한 정책 시스템이 필요함. | ○ 복원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장기적인 전략과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을 통합한 농업정책을 강조(EU) ○ 항생제 내성 문제와 가축질병에 대한 관심이 표명됨. |

3.2.8. 농업장관회의의 관련 농업위원회 논의 내용

- 만찬 주제와 관련, 수정된 주제인 국제협력강화에 만족하다는 입장(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과 무역이슈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나뉘었다.²⁶⁾

26) 지난 IAG 미팅(1.13)에서 저녁만찬 주제로서 혁신과 무역이슈를 양분되어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사무국이 '공동목표달성을 위한 국제협력강화(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로 수정

- 전체회의(plenary session)에서 원하는 장관들 모두에게 발언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기(일본, 칠레, 아르헨티나) 되고, 첫날 전체 회의의 의제가 환경에 치우친 것으로 본다는 의견(아르헨티나)도 제시되었다
- 장관 커뮤니케는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들이 초안의 일부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표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적하였다.
- Introduction, 최근의 식품과 농업의 환경과 논의 동향, 공동목표와 정책원칙, 장관들의 인식과 OECD에 요청사항 등으로 <표 14.>와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표 14. 장관 커뮤니케 초안 요지

| | |
|----------------------|---|
| Introdu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개국 장관이 농업과 식품분야의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모색함. ○ 소득이 늘어나고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품수요(특히 동물성 단백질)가 증가될 것임. ○ 재생에너지와 농산물의 비식품적 이용(non-food use) 수요가 증대될 것임. ○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식품분야는 환경에 영향(impact), 물과 토지 등 자원의 이용 간 경쟁(competition), 기온과 강우 패턴의 변화와 빈번해진 기후이변 등 환경에 영향을 줄여나아가야 함. ○ 식품과 농업분야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최근의 식품과 농업의 환경과 논의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해 이러한 이슈가 국제적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음 ○ MC10에서 수출보조금 철폐를 합의(2015.12) ○ 기후변화 파리협약(2015.12) ○ 2030년까지 빈곤퇴치(poverty elimination)를 포함한 UNSDGs²⁷⁾ (2015.9) ○ 지속성 있는 생산성 증대와 식품낭비(waste) 축소에 중점:G20, APEC, ASEAN, Berlin Green Week 등 ○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새로운 필요성에 충분히 부합하지는 못하며, 농업분야가 생산성증대, 경쟁력과 수익성 향상, 자연자원의 지속성 있는 관리 및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접근(integrated policy approach)의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음 |

| | |
|---|---|
| <p>공동목표 및 (shared goals) 정책원칙 (policy principles)</p> | <p>(공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 ○ 생산자들이 가용한 기회의 활용과 삶의 수준향상 ○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 지원이용,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 ○ 보편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 <p>(정책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적이고 분야별(성장, 고용, 웰빙, 환경 등)로도 부합하는 정책(economy-wide policies)이 필요하며 건강과 교육부터 물리적 인프라와 토지권리 등까지 조장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개선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에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됨. ○ 경쟁력을 갖춘 생산자가 새로운 시장기회를 추구(pursue)하도록 다자적 무역시스템으로 통합이 더 강화되어야 함 ○ 혁신과 생산성 증가를 R&D, 기술적용, 교육 및 훈련, 자문서비스 등을 통해 촉진(facilitate)할 필요가 있음. ○ 가용(available) 수자원, 토지, 에너지 및 생물다양성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생산 시스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負의 인센티브 제거 포함) ○ 기후로 인한 갑작스런 공급 부족 등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한 생산자의 회복력(resilience)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투명성, 목표지향성(targeted), 맞춤형(tailored), 신속성 및 형평성이 필요함. |
| <p>장관들의 인식 과 OECD에 요청사항</p> | <p>(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이해와 신뢰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주목(note)함 ○ 증대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생산성 증대, 지속성, 회복력 향상을 위해 OECD가 개별 및 공동 행동을 국제기구와 협력을 요청(invite)함 <p>(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ECD가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base)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urge)함 |

- 장관들은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시장전망(outlook), 경제·환경·사회·식량안보 등 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별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함
- 다음 사항을 우선적 관심사항(priorities for urgent attention)으로 정리(identify)함
 - 국가별 발전단계 및 자연조건을 고려한 식품시스템의 생산성, 지속성 및 회복성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inclusive) 정책 패키지
 - 혁신정책과 시스템 : 기초 및 응용 R&D, 기술의 적용 이전 채택,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지적재산권, 교육, 기술, 지도 서비스, 관련 제도 등
 - 기후변화에 적응과 완화 뿐 아니라 지속성 있는 수자원·토지·생물 다양성 자원의 이용의 증진(foster)
 - 민간(private), 시장(market)과 공공(public)의 행동(actions)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으로 개별 및 분야를 포괄하는(individual and sector -wide) 회복력을 증대하기 위한 위험관리 정책
 - 경쟁력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식품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정책
 - 식품과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기여하고 잘 작동(well-functioning)하는 국내외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 지식과 기술의 공유와 투자와 무역을 통하여 국제간 협력을 증진(foster)하기 위한 실용적인 행동(practical actions)

- 우리나라 등 1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IFAD) 등이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코뮤니케 수정안이 배포되었다.(2016. 2. 19)
 - 식량안보와 관련한 bio-economic 및 영양(nutrition), 농촌인구의 고령화 문제, 농업 역할론, 생태서비스(ecological service) 제공, MC10의 수출 보조 관련 일부 내용 및 환경 관련 사항, 개발(development), health 포함 여부, 다자간 무역 시스템과 식량안보, SPS와 TBT, DDA 협상 지속 등이 제기됨.
 - OECD 관점에서 농업과 식품분야에 대한 최근의 문제인식과 과제를 논의결과에 기반하여 적절히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 코뮤니케의 성격상 수정 또는 보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 장관 코뮌িকে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

표 15. 장관 코뮌িকে 초안에 대한 각국의 주요 의견(발췌)

| | 각국의견 |
|---------|--|
| General | <p>(호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 및 무역의 편익에 대한 더 많은 관련(reference)사항을 포함시켜 코뮌িকে 본문의 균형을 바로잡을(rebalancing) 필요 - 세계식량시장을 왜곡시키는 국내농업정책의 더욱 긴급한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강력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은 핵심적인 사항으로 코뮌িকে에서 보다 더 잘 설명되어야 함. |
| | <p>(칠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과 무역의 작동(the well-functioning)을 방해하는 왜곡정책을 방지(avoid)하는 긴급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필요 |
| | <p>(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 및 관련된 개혁의 중요성에 관한 장관들의 메시지가 약함. - 특히 과거 코뮌িকে의 일관된 특징인 농업개혁과정의 계속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 시장접근 및 국내지지의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함. |
| |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통일 : 'farm and food sector' 및 'agriculture and food sector' |
| | <p>(IF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개발, 극심한 빈곤 및 기아를 종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농에 관한 특징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중요함. |
| | <p>(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농업장관회의에 관한 문구 포함 |

| | 각국의견 |
|--------|---|
| para 2 | <p>(노르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식량부문이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서”(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iorities) 세계식량안보를 개선하면서 기후변화 완화에 중대하게(significantly)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완화 <p>* 사유 : 파리협정에 따라 COP21에서 승인한 상향식 접근방법과 일관성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특히 농업은 완화가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함.</p>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economy and food security 추가를 지지함 <p>(IF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와 함께 영양(nutrition)에 대한 언급 필요 <p>* 사유 : SDGs의 맥락에서 농업은 기아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적인 컨센서스의 보조를 맞추어야 함.</p>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인구고령화(population aging) 및 인프라 악화속에서”(amidst population aging and deteriorated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의 구절을 추가 <p>* 사유 : 정책결정자들은 농업 및 식량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농업활동이 우월한(dominate) 농촌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용하여야 함, 이러한 농촌지역은 인구고령화 및 악화된 인프라 등 당면 도전과제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임</p> <p>(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식량부문은 생태계서비스의 제공을 지속하여야 한다(the agriculture and food sector will have to sustain provision of ecosystem services)는 내용을 추가 <p>* 사유 : 정책수립자들은 생태계서비스의 제공의 지속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야 함. 이 서비스는 식량, 물의 제공과 같이 인류생활에 근본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야 함.</p> |

| | 각국의견 |
|---------------|--|
| <p>para 3</p> | <p>(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제10차 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자구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focus on these and related issues has been particularly prominent over the past year. The WTO's 10th Ministerial Conferenc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nd food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agreed to eliminate <u>addressed some of the most distortive policies by eliminating</u>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 <u>disciplined</u> other forms of export support, but left other important issues unresolved.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제10차 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문장(but left other important issues unresolved) 삭제 <p>(IF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및 과정에 “Addis Ababa Action Agenda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추가 * 사유 : 특히 농업 및 농촌개발을 통해 기아 및 영양실조 종결(ending)에 대한 투자의 촉진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강조점(focus)을 반영 |
| <p>para 4</p> | <p>(우리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정책이 새로운 요구와 필요에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다는 전체 부정적인 표현을 부분부정적인 표현으로 수정 • Ministers also noted that while policies for food and agriculture have begun to change,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cy settings are not sufficiently aligned with emerging needs; in some cases, policy settings need to be accelerated to meet emerging needs. <p>(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농업협정문 제20조에 규정된 농업개혁과정 끊임없이 이행은 (persistently) 높은 수준의 무역 및 생산왜곡적 지지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로 남아있다는 문구를 추가 • <u>“Implementation of the reform process set out in Article 20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remains a priority, not</u> |

| | 각국의견 |
|--------------------------|--|
| | <p><u>least to address persistently high levels of trade and production distorting support.”</u></p> <p>(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절 후반부의 통합적인 정책접근에 대한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는 대상 과제로 “농부들과 식량부문은 회복력을 개선한다(improve resilience)를 추가 * 사유 : 상이한 근원(기상 및 기후, 금융관론, 또는 기타 충격)의 충격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농부의 회복력을 개선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대등하게 중요함. |
| <p>para 5 (공통목표)</p> | <p>(노르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목표 1번에 건강(health)을 포함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provide all consumers with reliable access to safe, <u>healthy</u>, and nutritious food. <p>(노르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목표 3번 : “환경보호”라는 용어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productivity and resource use <u>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u>, mitigation of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silience in the face of risk, an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and ecosystem services. * 사유 : 환경보호라는 용어가 모든 차원을 포괄하고 있음. |
| <p>para 6 (정책원칙)</p> | <p>(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원칙 1번 : “정책은 조치(measures)가 아닌 목적(objectives)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 수정 : measures → objectives <p>(노르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원칙 3번 (농업식량부문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확대 정책) : 공급자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다 균형적인 방안을 제안함 |

| | 각국의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ies need to enable further integration of the sector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o that competitive suppliers everywhere are able to pursue new market opportunities on an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sustainable basis. <u>support a well-functioning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trade for economic growth, development and global food security.</u>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gration of the sector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o that competitive suppliers everywhere are able to pursue new market opportunities on an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sustainable basis. <p>(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절 마지막에 “This while observing the principles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RBC)”추가 * 사유 : RBC는 네덜란드에 우선순위가 높음. 이전 초안에서 삭제된 것임. 최근 채택된 OECD-FAO의 Responsible Agro-Food Chains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 <p>(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원칙 4번 (혁신정책) : cross-sectoral cooperation 추가 <p>(노르웨이, 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원칙 5번 (가용한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사람 및 동식물 건강을 보존하는 생산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정책 필요) : 항균제내성 (AMRs)의 해결 및 사람 및 동식물의 건강을 하나의 접근(one health approach)방식으로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 |

| | 각국의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ch preserve <u>promote</u> animal, plant and human health. <u>plant, human, and animal health, including combatting antimicrobial resistemce through a one health approach.</u>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entives 자구수정(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entives를 encourage, stimulate, invigorate, foster, motivate, advocate, promote 등으로 수정 <p>(호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entives가 농업보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은 용어로 대체되어야 함 <p>(칠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entives가 보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함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entives 제공 구절을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ies need to provide incentives (and avoid dis-incentives) for <u>foster</u> production systems that use available water, land, energy, and biodiversity resources sustainably and which preserve animal, plat and human health.” <p>(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est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tion system that use available water, land, <u>forest</u>, energy, and biodiversity resources sustainably” |
| para 7 (국제협력 대화강화 및 OECD 역할) |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장관들이 강조한 국제협력강화분야로 무역, 투자, 혁신, 기후변화 이외에 transparency를 포함시키고 IOs를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로 수정 • the areas of trade, investement, innovation, <u>transparency</u> and climate change |

| | 각국의견 |
|-----------------------------------|--|
| |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a 7 후반부의 OECD에 대한 요구사항에 “OECD의 정책 모니터링 및 농업전망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에 대하여 보다 강한 표현 필요. ○ 구절의 시작되는 첫머리에 그 이유로 Global Value Chains, (GVCs)의 순기능(well-functioning)과 국가 상호간 상호의존성에 관한 사항(reference)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p>(일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절 마지막에 농업장관들은 2016년 이후 G7, APEC등이 주관하는 대화를 환영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n this context Ministers welcomed further dialogue under the auspices of G7 and APEC during 2016 and beyond.</u> * 사유 : OECD 장관회의 결과는 중요한 농업현안에 관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토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관련 회의의 토의 자료로 제공되어야(feed into)함. 따라서 코뮈니케는 G7, G20, APEC을 포함한 앞으로 개최될 관련 회의에 이러한 정치적 신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임. |
| <p>para 8 (OECD작 업계획)</p> | <p>(멕시코, 호주, 칠레, 네덜란드, 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번 항목 : agro-ecological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혼란스러우므로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ntegrated agro-ecological and other policies to foster sustainable use fo water..”</u> * 사유 : 사람 및 나라에 따라 의미가 다른 혼동스러운 용어임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grated agro-ecological and other polices”에서 Integrated를 <u>“Environmental sustainable agricultural or Environmental integrated”</u>로 수정 * 사유 : OECD는 Agro-ecology를 농작물 및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였으며 글로벌농업포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용어에 혼란이 있었으며 덜 애매하고 논쟁거리가 없는 용어의 사용을 선호함. |

| | 각국의견 |
|--|--|
| |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번 항목 (사람, 동식물건강 보호정책) 관련 사람의 건강(human health)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코뮤니케에서 이를 빼도록 요구(push)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농업장관회의 권한(mandate)밖에 있으며, 농업위원회의 분석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함. <p>(노르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SPS 및 TBT 협정의 의무조항과 일치하게 수정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olicies Science-based and technically sound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and plant health and life and other legitimate objectives throughout the food supply chain.</u> <p>(노르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도하라운드 협상에 대한 협조를 8번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ooperate to continue in the Doha Round negotiations as the WTO the ongoing process of fundamental reform in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to achieve substantial reductions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nd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as the main way to enhance global food security.</u> <p>* 사유 : 2001도하 맨테이트과 일치하여 자유롭고 투명하며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으로의 이동(moving)의 중요성에 대하여 반복해서 언급되었음.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WTO 나이로비 장관회의 선언에서의 회원국의 약속에 따라 매우(extremely) 중요한 미정상태인(pending) 농업개혁(시장접근 및 국내지지)을 지속하기 위한 WTO에서의 행동의 조정(coordination)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함.</p> |

3.2.9. 2016 농업장관회의 배경문서에 대한 주요국 의견

-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 등 다수국가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수정된 배경문서가 배포됨(2016. 2. 19).
- 수정 배포된 배경문서는 논의결과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지속적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일부 배경문서에 대한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반영 내역은 <표 16.>, 1차 배경문서에 대한 주요국 의견은 <표 17.>과 같다.

표 16. 배경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제기 사항 반영 내역

| | 문제제기사항 | 수정문서(2016.2.18.) |
|---|--|---|
|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 물집약사용 작목의 구입제한 관련 내용은 농민의 나쁜 선택을 초래한다는 내용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음 | ○ 수입관세 관련 내용이 삭제됨. |
| Agriculture and water | 물 집약사용 작목의 관세철폐 내용은 타당성이 결여 | ○ 관세철폐 관련 내용 삭제 |
| Agricultural market and prices: Toward 2025 | 수출국과 수입국의 균형 기술이 필요 | ○ 수출집중과 수입국 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추이는 국제시장의 원만한 기능이 필수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됨. |

표 17.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배경문서(1차, 2016.1.26.)에 대한 주요국 의견(발췌)

| 배경문서 | 주요국 의견 |
|-------|--|
| 일반 의견 | (일본) 일부 내용은 기존의 OECD 국가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예, 수자원 가격 책정) (스웨덴) 위험 관리에 대한 배경문서 추가 환영. 식품안전성(동식물 복지, 식품잔유물)에 대한 배경문서 추가 필요. 배경문서의 그래픽과 차트 가독성 향상 필요 |

| 배경문서 | 주요국 의견 |
|--|--|
| | <p>(캐나다) 각국 장관을 위한 문건이면 길이를 좀 더 줄이고 좀 더 평이하게 작성해야함. 일부 그래프가 읽기 어렵고 문제 있음.</p> <p>(이탈리아) 짧고 덜 기술적인 언어로 가독성을 올릴 필요 있음, 몇몇의 배경문서는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는 기술이 필요함</p> |
| <p>1. Building robust food systems for an unpredictable future</p> | <p>(스웨덴) 여러 정책 수단 중에서 소비자 구매 행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흥미로움. 지속 불가능한 패턴에 대한 예를 들지 않아 논란을 피하고 있음</p> <p>(오스트리아) 2번 문건(Ag market and prices)에서는 식량 및 농업부문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언급하나 본 문건에서는 실질 가격 하락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명확한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이 필요.</p> <p>(캐나다) 기존 문건(JWPAE Long-Term Strategy)과 일관성 있고, 구체화되어야 하며, 혁신에 대한 논의 필요</p> |
| <p>2. Agricultural markets and prices : Towards 2025</p> | <p>(스웨덴) 유가가 낮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농업부문의 실질 가격 하락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나 향후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어조를 낮출 필요 있음. 시장개방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고려가 필요함.</p> <p>(일본) 향후 10년 동안 농산물 수출은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반면 “수입은 다수 국가로 분산된다”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미와 아프리카 구분하여 기술 : “남미에서 단수 증가와 경작지 증가가 예상되고, 아프리카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가 단수와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도 있지만 적당한 수준의 생산 증대가 예상된다.” - 실질 가격 증가에 대한 근거 문서 추가, OECD-FAO 전망에 연도 추가(2015), 향후 10년 이내에 “큰 가격 변동(swing)”을 “국제시장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각한 충격(shock)”으로 수정 - 수자원이 제반여건과 상관없이 가격 책정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자원과 같은 부족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가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문장에 “수자원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에서”를 추가하여야함. |

| 배경문서 | 주요국 의견 |
|--|--|
| | <p>(캐나다) 낮은 원유가격이 1세대 바이오연료 곡물 생산에 대한 유인을 거의 없앴다는 논지가 다소 강한 어조임, 에탄올의 경우 사실이지만 바이오디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바이오연료와 농산물 가격의 관계가 과도하게 단순히 기술되었음, 계속 논의 중이지만 바이오연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 시장과 요소들 간의 관계의 복잡성을 나타냄</p> <p>(네덜란드) 시계열 예측 시 유가가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회복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5-2024년에 그러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 언급 필요. 시장개방이 비교우위의 무역을 통해 효율적 자원 배분은 가능하지만 환경적인 영향을 감안하고 있는 것은 아님, 환경훼손이 실제 지출로 잡히지 않는 한 시장개방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진술은 무리 있음</p> <p>(이탈리아) 수자원의 유료화(가격책정)는 제반 여건상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를 제안</p> |
| <p>3.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p> | <p>(일본) 일관성 있는 제목 사용 필요. 적절한 인용 필요, 농업 소득 안정화 정책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단수가 감소될 때 농민의 적절한 이익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can)에서 can을 sometimes로 수정, (직불제와 관련) 토지소유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 정책이 “거의 정당화되지 않지만(almost never justifiable, although)” → seldom justified, but으로 수정, (자원부족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한 이유에) 증가된 인구가 “더 다양한 식생활을 요구하는(demanding a more diverse diet)” 것을 추가</p> <p>(캐나다) 잘 요약되어 있으나 보다 압축적이고 큰 글자로 정리 필요</p> |
| <p>4.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p> | <p>(스웨덴) 생산력 강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는 OECD의 중요 화두로써 생산력 강화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임</p> |

| 배경문서 | 주요국 의견 |
|--|--|
| | <p>(한국) 물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작목을 보호하는 수입제한이 나쁜 선택(bad choice)을 더 나쁘게 한다는 내용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됨.</p> <p>(일본) 논벼의 생산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 있음을 언급 필요, 온실가스나 질소산화물(NOx) 등과 관련된 내용에 근거 자료 첨부 필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수입 제한이 어떻게 생산자의 비효율적인 선택을 낳는지 근거로써 적절한 인용 필요</p> <p>(캐나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이오경제에 대한 언급 없음.</p> <p>(네덜란드) 농업이 잠재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부임이 진술되고 있으며 탄소 격리 기능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p> <p>(이탈리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에 대한 개념과 온실가스 감축 수치에 대한 근거 자료 추가 필요</p> |
| <p>5. Agriculture and water : Towards resilient, sustainable and productive systems</p> | <p>(일본) 다음 문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인용) 필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자원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수량과 가격 변동이 가능하여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수자원 배분 시스템 구축, 수자원 사용에 대한 충분한 기회비용 만회, 가격 왜곡과 관련된 비수자원 정책 제거</p> <p>(한국) 수자원 집약 사용 작물에 대한 관세 철폐내용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p> <p>(네덜란드) 수질 악화 이유 중 염화(salination) 추가 필요,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곡물 (생산)에 유리한 “수입 관세”에 대한 정의는?</p> |
| <p>6.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in agriculture : Trends and policy performance</p> | <p>(캐나다) 생산성 증대를 총요소생산성(TFP) 증대로 측정한 것은 적절함. 그러나 TFP 증가 시 투입요소 또한 증가하므로 TFP 증가가 환경적으로 적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음. TFP 증대는 매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10-12년 정도의 짧은 시계열 자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어려움. 호주, 캐나다, 프랑스를 “몇몇의 주요</p> |

| 배경문서 | 주요국 의견 |
|---|--|
| | <p>농업 생산국”으로, 생산성 증대를 “TFP 증대”로, 지난 십년간을 지난 “수십년간”으로 수정 요구함. 단수는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를 무시한 것으로 TFP와 일관성 결여. 단수는 품목별로 달라지는데 일부 주요 품목만을 다루게되어 단수 자료를 가지고 생산성 증대에 대해 언급하면 부적절함(단수를 포함한 문장 삭제 요망). (정책이나 수단) 제거라는 표현을 경감으로 수정 요구. ‘농법중심에서 결과중심의 효율적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명확히 다시 기술하거나 삭제</p> <p>(네덜란드) 본 문건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성은 환경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명확히 표현해야함, 정책제안들이 순위(2, 4, 5, 3번 순으로)를 가져야 하며 정책의 폐지 등은 첫 번째 순위로 부적절, 첫 번째 제안의 의미 불명확, 농가소득지지는 outcome-based 정책으로써 혁신을 줄이는 정책의 예로 꼽기에 부적절, 식품 폐기 및 손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투입/생산물 시장의 역할과 관련되어 수확후 감모나 식품 폐기 감소 방안 등 언급 필요</p> <p>(이탈리아) 생산성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수’가 저하되고 있다는 단락은 부정확하므로 삭제 필요</p> |
| <p>7. Adapting innovation systems to new challenges</p> | <p>(네덜란드) OECD의 농업 R&D에 대한 투자가 감소된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분적으로 민간 부분의 투자 증대로 인한 것을 명시할 필요 있음. 환경과 기후 측면에서도 개별 농업인 수준에서도 기술 혁신이 중요함을 추가해야함.</p> |
| <p>8. Getting the policy mix right for global food security</p> | <p>(일본) 식량 안보에서는 공공비축이나 수출제한 등의 논의 필요. APM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식량안보 문제는 자연적 재앙, 시장 붕괴, 정책 충격 등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단기의 위험과 관련이 있으므로 단기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대처방안 논의 필요. 쌀가격 급등에 대한 강조할 이유 없으므로 삭제 필요 다음 문장에 대한 적절한 인용 필요</p> |

| 배경문서 | 주요국 의견 |
|---|---|
| | <p>- 식량안보가 1992년 이래 개선되었다. 7억9300만 명의 식량 안보 노출, 식량안보 문제의 65%가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집중, 식량안보 노출의 원인이 가난뿐만 아니라 “예측불가능한 단기 (생산) 위험” 추가, 해결방안에 “리스크 관리” 추가, 영양부족에 대한 예측치에 대한 근거 자료 추가.</p> <p>(캐나다) 농업생산 증대 및 무역 증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식량원조나 비축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음. 무역의 중요성은 식량 공급에 대한 농업의 역할에서 논의되어야 함. 다른 문건들과 달리 malnutrition이 아니라 under nourishment로 언급하는 이유는? food availability와 access to affordable food는 동일 의미인지? 그림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므로 대체하거나 단순화 필요함</p> <p>(네덜란드)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시장의 역할과 지역적 접근도 필요함</p> <p>(이탈리아)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분에 영향을 주므로 단정적인 문장을 좀 더 완화할 필요 있음, 종자 개량에 대한 지원이 식량 안보 사슬의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문구 추가 필요</p> |
| 9. Strengthening how agricultural and food markets function | <p>(스웨덴) 생산자가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소매점들의 약한 경쟁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예에 불과함</p> <p>(캐나다) 농산물 가격에 대한 독점적 기업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동일 기간에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몇몇 국가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음.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는 상당히 많은 상품을 고려하여 식품가격인지 전반적 물가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곡물 가격이나 빵가격 등이 나은 지표임. 가공, 물류, 마케팅 비용 등과 같이 농업생산물 가격과 별개인 항목이 있고 장기계약에 의해 가격 전이를 낮출 수 있는 등 농장가격이 가공식품가격이나 소매가격에 연동이 되지 않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함. 낮은 농가수취율이</p> |

| 배경문서 | 주요국 의견 |
|--|--|
| | <p>반드시 농업인의 낮은 수입을 의미하지는 않음.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소수의 소매상들이 심각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어 농산물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NGO들은 높은 수준의 환경적/동물복지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격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의 활동은 담합으로 규정되고 있음. 따라서 생산자들의 교섭력을 늘리고 경제적으로도 적절한 지속가능한 생산 증대 방안 필요</p> |
| <p>10. Reaping the benefits of trade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farm and food systems</p> | <p>(스웨덴) 자유무역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 바람직한 요소로써가 아니라 그 자체를 (달성해야하는) 목표로써 기술되어 있음.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하지 않는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님.</p> <p>(캐나다) OECD는 남미와 아시아를 무역왜곡 정책이 만연한 곳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비취지므로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수정 필요. agro-food는 용어가 정의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 그림의 가독성이 떨어지며 의미가 불확실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음. 개도국, 남남 무역의 증대와 무역이익 증대와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술 필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경제 성장에 의해 (무역에 왜곡을 가져오는) 농업정책이 증가되었음 추가 필요. 비관세조치(SPS, TBT)들이 보호주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과학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음.</p> <p>(네덜란드) 동등한 경쟁조건하에서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의 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p> |
| <p>11. Farm structures :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managing transitions</p> | <p>(캐나다) 개도국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나 문건에서는 전체 국가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제목에 개도국으로 명시 필요</p> <p>(네덜란드) 개도국과 신흥국내의 소농에 대한 차이와 선진국의 소농과의 차이 명확히 해야 함. 이들 모두 생존에 어려움이 있고 규모화나 소득다각화 등의 해법은 비슷하나 문제의 규모는 매우 다름.</p> |
| <p>12. Agriculture at Risk Management : A Holistic Approach</p> | <p>(참고) 2016년 2월 25일 배포된 문서임.</p> |

3.2.10. 2016 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예상 이슈

예상 이슈

- 빈곤타파 : 개도국 농업 발전, 식품가격의 영향, 농촌발전, 농가소득증대
- 식량안보 : 농업의 특수성과 다양성, 수출규제, 식품낭비방지, 농업생산성증대, 농업 자원의 경합성
- 농업 생산 증가 :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 회복력 등
- 시장 개방 : RTA vs. MTA, Post-Nairobi, 식량안보와의 관계
- 기후 변화 : 온실가스감축(농업부분이 14% 차지), Non-CO₂
- 수자원이용 : 비용부가(costing) 문제, 물집적사용 작목(water intensive crops)의 영향
- 기타 : 가축질병, 동물복지, 식품안전 등

3.3.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

3.3.1 2016 농업각료회의 준비 진행 상황 (2016.2.15. 기준)

- 2016.2.15. 현재 의장단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공동의장 : 프랑스 / 미국
 - 분임별 토의(Break-out Session)
 - 분임수 : 10개
 - 의장단 : 프랑스·미국(공동의장국, 2), 네덜란드·독일·오스트리아·뉴질랜드, 멕시코(5), 비회원국+국제기구(3)

가. 장관회의 진행방식과 예상

- 장관회의 진행 방식은 2010년 장관회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회의는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발언하되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만찬 및 오찬은 Working Dinner와 Working Lunch의 형태로 원칙적으로 장관 1인만 참석(통역은 뒤에 배치 가능)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 장관회의 진행 단계별 준비 사항

○ 장관회의 진행 단계별 일정과 준비사항은 <표 18.> 과 같다.

표 18. 장관회의 진행 단계별 준비 사항

| 구분 | 일시 | 준비사항 |
|----------------------|------------------------|---|
| 기자회견 | 개막전 | ○ 비전(vision) 발표 형식으로 진행 예정(의장단) |
| 개막식 | 2016.4.7.(목) 14:30 | ○ 사무총장 및 공동의장 환영사 |
| 전체회의 (Session I) | 2016.4.7.(목) 15:00 | ○ 수석대표 발언문(3분 내외, 필요시) |
| Break-out Session | 2016.4.7.(목) 전체회의 후 | ○ 예상 쟁점별 발언자료(talking points) 준비 (정책조합과 균형) - 현행 정책 조합과 새로운 정책 조합 - 새로운 정책 변경의 효용성(생산성, 지속성, 회복력, 기후변화 관련) - 장·단기적 정책 균형 - 일반 서비스와 특정 정책 - 국제협력 우선 분야 |
| 업무만찬 | 2016.4.7.(목) 19:30 | ○ 발언자료(국제협력 강화) 준비 |
| 전체회의 (Session II) | 2016.4.8.(금) 09:30 | ○ 수석대표 발언문(필요시) (첫날 회의결과에 대한 comments 포함) |
| Break-out Session | 2016.4.8.(금) 09:50 | ○ 예상 쟁점별 발언자료 - 성공적 정책변경 프로세스의 교훈 -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이해관계자 참여 확보 방안 - OECD 데이터 수집과 분석능력 |
| 업무오찬 | 2016.4.8.(금) 12:30 | ○ 예상 세부쟁점별 발언자료 준비 -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적정 정책조합(policy mix)의 정의(defining) |
| 전체회의 | 2016.4.8.(금) 14:30 | ○ Closing Session |

3.3.2. 전체회의 발언요지 : Session I, II

가. 논의배경 및 대응 전략

- OECD 중기전망, 농업변화 예측(foresight exercises), 최근 다자 협의(UNSDGs, MC10, COP21, G20 등)에서 등장한 쟁점 등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주제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A new policy paradigm for agriculture and food, Session I) 및 공동목표 실천 방안(From shared goals to concrete actions, Session II)
-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연계하여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발언 요지 참고 points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글로벌 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구증가에 따라 2050년까지 식량을 50% 더 생산해야 할 것임. |
| 현실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등 농업생산을 위한 여건은 더 불리해질 것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적 이상 기후의 위험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짐. - 식량의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지고 이는 지속적인 농업 생산에 부정적 영향 ○ 소득증가에 따라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도시화의 진전, 식품낭비, 분배의 불균형, 한계지(marginal land)의 황폐화 등의 현상이 발생 ○ 동일한 정책도 국가별 상황, 선진국/개도국 또는 수입국/수출국 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결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과 농업의 문제는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one size fits all)은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과 기술, 분배, local food system 및 적절한 인센티브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농업과 식품 분야에는 지역성, 역사성 등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농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비농업과 부문(sectors)간 수평적 협력, 부문 내에서 수직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봄. |

3.3.3. Break-out Session 대응 자료

가. 대응전략

- 쟁점별 입장 차이에 대한 논쟁적 대응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언급하되 OECD 에서 논의 내용은 국제 규범화의 선행적 의미도 있으므로 우리나라 농업의 장기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둔 대응이 바람직하다.
- 발언은 10~12개국 또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100분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됨을 고려할 때 발언 회수는 2-3회, 시간은 각 2분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주제

- 정책의 조합(policy mix), 장·단기 정책 간 균형 및 포괄정책과 특정 정책 간 균형(balance)
- 성공적 정책변경 프로세스의 교훈(lesson), 장애(obstacle), 이해관계자(stakeholders) 등

다. 발언요지 참고 points

- 정책조합(policy mix) 관련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조합을 정책도구(instruments)의 선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개입이고 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개입 수단의 선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봄. |
| 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생산과 소비의 지역성, 역사성에 유래한 다양성이 내재 되어있고 그만큼 동일한 문제라도 각 국가마다 정책의 선택이 다를 수 밖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 농촌문제 등 산업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책이 패키지화되고 그 패키지에는 여러 가지 세부정책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정책은 추진주체가 다르고 정책 간 상호작용이 있게 마련임 ○ 상호작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정책의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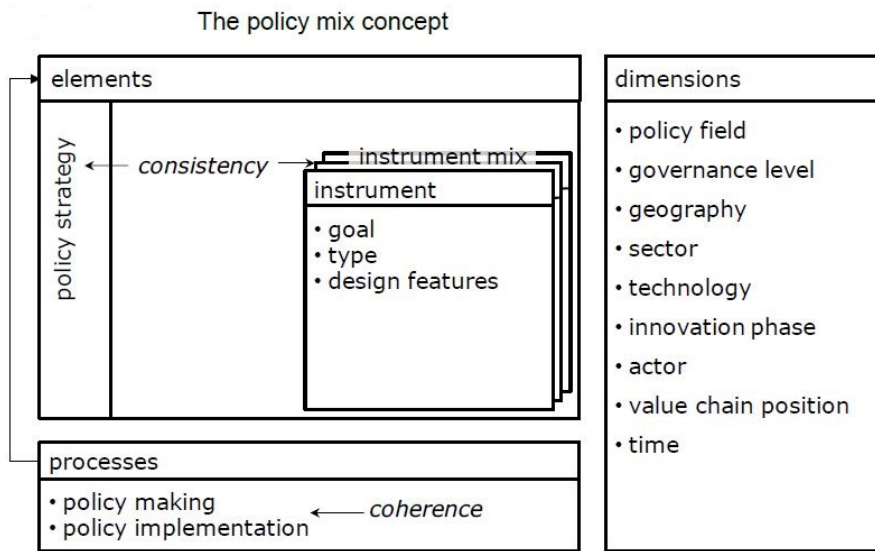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정책수단 간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상충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봄. - 다만 그러한 상충성은 기간적으로는 단기간, 양적으로는 의도된 효과로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 <p style="text-align: center;">결론 (우리나라의 경험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책조합의 성공적 사례로 6차 산업을 이야기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산업은 농업, 제조업, 관광이라는 정책이 조합된 형태로 이러한 정책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개발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현하고 있음. - 1, 2, 3차 산업정책의 수평적 조합과 생산·가공·판매의 수직적 정책 조합의 형태임. ○ 또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철학이 정책패러다임에 내재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정책 자율성이 존중되어야함. ○ WTO 등 글로벌 시스템은 각국의 정책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공동목표의 수행과 잘 부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개별국가 정책에 대해 다자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함. |

○ 정책변경 프로세스(policy change process) 관련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p style="text-align: center;">필요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정책 변경의 어려움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정책변경을 어렵게도 함. ○ 금번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봄 |
|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나라의 경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이 시행한 다양한 정책 중 글로벌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대표적인 정책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 우리나라의 경우, FTA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추진한 국가의 하나이며,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책변경 결정 프로세스를 마련한 것이 기여 했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3년)하여 그 이전보다는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했음. |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 <p>- 아직 만족할 정도도 정립되지는 못했지만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정책변경 프로세스를 제도화한 이후 그런 유형의 문제는 줄어들.</p> |
| OECD에 대한 요구 | <p>○ 정책변경의 프로세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책효과의 이해관계자 별, 시기 별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임.</p> <p>- 이런 점에서 OECD가 연구한 모형 등 다양한 연구가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p> <p>○ 농업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람.</p> |

그림 1. 정책조합(policy mix)의 개념²⁸⁾



28) Towards a more comprehensive policy mix conceptualization for environmental technological change : a literature synthesis, Caroline S.Rogge 외, 2013, Fraunhofer, p28

[참고] 정책조합의 정의²⁹⁾

| 근거 | 정의 |
|-----------------------------------|--|
| Guy et al. (2009) | ○ 직·간접적으로 시스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세트(set) |
| Kern and howlett (2009) | ○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 발전을 의미하는 다수의 목표(goals)와 수단(means)의 복잡한 배치(arrangement) |
| Nauwelaers et al. (2009) | ○ 정책도구의 조합(combination) |
| Boekholt (2010) | ○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알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구(instruments)의 조합 |
| De Heide (2011) | ○ 상호작용하는 정책도구의 조합 세트(set) |
| Ring and Schröter-Schlaack (2011) | ○ 정책도구의 조합 |

3.3.4. 업무만찬

가. 논의개요

- 주제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최근 관련 상황 및 논의 전개 예상
 - 국경초월(cross-border) 이슈와 관련한 주제가 당초 무역(trade)이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로 조정된 점, 협력의 분야로 무역, 투자, 혁신 등으로 명기하고 있음에 비추어 최근 WTO 문제 등 과 관련한 무역 관련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역과 관련, MC10 결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DDA 종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일부 국가는 DDA 협상의 지속을 통한 원활한 마무리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예상된다.
 - 또한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개도국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29) 앞 출처(각주28), p4의 정책조합 개념(R&D)을 필자가 농업정책의 관점에서 수정하였다.

- 진행방식
 - 식사를 겸한 토의 형식으로 가급적 짧게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응전략
 - 쟁점별 우리의 기본입장을 염두하고 OECD 차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수준에서 대응

나. 발언요지 참고 points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cross-border) 이슈는 무역뿐 아니라 원조, 질병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 ○ 국간 간 이슈는 동일 문제라도 국가 내 문제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제도적 접근이 중요함. ○ 무역에서 식품은 단순히 재화의 교환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다른 품목과는 달리 인식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
| WTO 등 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체제가 돌파구(breakthrough)를 찾아야하는 시점에 있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는 어떤 형태로든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함. - RTA가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DDA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최근 RTA가 확산되고 있고 그 규모도 지역을 블록으로 하는 형태로 매우 커지고 있음. - RTA는 개방의 폭이나 속도는 WTO보다 크고 빠르나 품목 특정적 및 이슈 based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 RTA의 확대가 MTA의 발전에 기여하는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new thinking)이 필요함. |
| 결론 (가축질병, 개도국지원, 농업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국가 간(cross-border) 이슈인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FMD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에 개도국 농업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글로벌 농업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함. |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자율성 등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여건이 유사한 선진국의 농업구조 전환과 발전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에서 발전한 경험을 전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실행하고 있음. ○ 혁신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부자극과 경쟁이 필수적이나 속도와 강도 면에서 해당국가의 농업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3.3.5. 업무오찬

가. 개요

- 주제: 식량안보의 증진(Building global food security)
-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적정 정책의 정의(Dialogue on the theme of defining the optimal policy mix to achieve food security)
 - 정책개입의 형태: 장·단기 및 국가·지역·글로벌 식량안보
 - 이해관계자의 소통 및 적절한 정책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분석
- 최근 관련 논의 동향
 - 식량안보는 G20, WFS, COP21, MC10 등 대부분의 글로벌 이벤트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
- 대응전략
 -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기본 입장

나. 발언요지 참고 points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개념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식량안보를 둘러싼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적 인식이 역사적 시기와 국가마다 다양한 것을 의미함. - 1976년 WFS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 세부쟁점 | Talking points(참고) |
|--------------------|--|
| 글로벌 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76개국이 식량불안전 상태에 있음. - 이 중 아프리카 44, 중남미 11, 아시아 22개국이며 세계인구의 20.4% 수준임. |
| 식량안보의 구성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의 구성요소로는 크게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활용성(affordability), 지속성(sustainability) 및 이를 지원하는 거버넌스(network)라고 할 수 있음. |
| 결론 (우리나라의 경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경제개발 단계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경제발전에 주요한(critical) 요소임. - 한국전쟁 이후 주곡 증산을 위해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품종(통일벼) 개발에 성공(1973년)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의 고투입에 의한 증산 위주의 농업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농업으로 나가고 있음. - 기술 혁신의 중심이 생산성 증가에서 안전성, 품질, 기후변화 등의 대응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책개입의 형태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체제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야하나 그 과정에서,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함. ○ 농업의 다양성과 지역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고 식량안보는 국지적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국내생산과 수입의 조합이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

표 19.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 정리³⁰⁾

| 주체 | 식량안보 정의 |
|---------------------------------|--|
| 세계식량정상회담 (World Food Summit) |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 |
| 유럽연합 (EU) | 기아와 영양실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식량생산이나 획득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는 상태 |
| 미주농업협력기구 (IICA) | 인류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 하에서, 그들의 문화적 선호를 유지하면서 식품에 대해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가지는 상태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영양적 필요량과 생활, 건전한 삶을 충족하는 것 |
| 식량농업기구 (FAO) |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섭취욕구와 식품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식품)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나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 |
| OECD | 모든 국민이 그리고 언제든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품을 영양적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식량안보의 위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총체적인 접근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현상으로 인식 |
| 영국 | 생산, 분배, 가용성, 경제적 접근성 및 안정성, 안전성과 영양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 |

30) 김태호 외, 식량안보 지표개발 연구, KREI, 2013.12를 토대로 필자가 일부 수정

표 20. 교역이 식량안보의 4가지 측면에서 미치는 단기·중장기 효과³¹⁾

| 구분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
| 가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은 수입(import)을 촉진시키며, 이용가능한 식품의 양과 종류를 증가시킴 ○ 중장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개선을 통해 식량 증산 - 해외경쟁 심화는 투자 확대—R&D, 기술 유출효과 등을 통해 생산성 개선에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 식량수출국)국제시장의 가격 상승은 일부 국내 소비를 위한 생산물을 수출로 전환시켜 잠재적으로 국내 주식 가용량을 감소 시킴 - (순 식량수입국)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는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을 감소시켜, 국내 공급량 및 농촌경제에서 농업활동의 다양한 효과 감소 |
|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 식량수입국)국경보호가 완화될 경우 식량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 - 수입 식량 및 투입재 가격이 하락 ○ 중장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득 증대 - 수출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의 교역 증대에 따른 거시적 편익이 성장지원, 고용증대, 소득 증대를 가져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 식량수출국)수출가능 품목의 국내가격 상승 ○ 중장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한 수입경쟁 부문의 경우 일부 생산자들이 타 직종으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소득이 감소 - 소수 수출 작물에 편중된 개발로 이윤의 불평등한 배분 |
| 활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식량이 이용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균형적이고 다양한 식단 이용 가능 ○ 중장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이 선진 국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나 국제규범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칼로리는 높고 영양가는 낮은 값싼 즉석식품의 소비 증가 ○ 중장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전통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와 자원이 기타 수출 우선 상품의 생산을 위해 전용됨 |

31) 세계식품과 농수산 제625호 제58권 제2월호 33페이지

| 구분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
| 안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으로 소비자의 식량가용성과 가격에 대한 계절적 영향이 완화됨 - 수입은 국내 생산 부문의 위기로 초래될 수 있는 식량 부족 가능성을 완화시킴 ○ 중장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시장은 정책적 또는 날씨에 기반한 위기에 덜 취약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정책에 따른 의무사항들은 단기 시장 쇼크에 대응할 수 있는 각국의 정책결정 재량권을 제한 - 수출금지 등 수출국의 교역정책 변화에 취약성을 가짐 ○ 중장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발전단계에서 각 부문들은 가격 쇼크 및 수입 증가에 취약 |

[참고] OECD 농업장관회의 관련 농업위원회 논의 결과³²⁾

1.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Agriculture) 회의결과

가.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02.02., OECD 본부(파리)

나. 주요회의 내용

(1) 핵심요지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제 10차 WTO 장관회의와 농업분야간의 관계, 농식품 분야 위기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향상 방안 방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있었음.
 - 주요 정책 방향으로 수자원 관리 강화, 농지·산림의 탄소저장 기능 확대, 식량안보 해소, 비관세장벽 완화, 위험관리 개선, 과학적 증거(측정 등)에 기초한 정책 추진 등이 제시되었고, 이번 포럼에서 논의 된 사항을 OECD 농업 분야 업무방향 설정에 참고하기로 함.
 - 다만, WTO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무역왜곡적 요소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과 시장 활성화에 앞서 소규모 저소득층 생산자 및 수입국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었음.

(2) 상세내용

- 포럼 의장(Mary Bohman, 미국 농업부)은 글로벌 농업 포럼이 국제무역,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농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임을 설명함.
- Mari Kiviniemi(OECD Deputy Secretary-General)가 환영사를 통해, 회원국 및 초청국의 장관들이 금년 4월 농업장관회의에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을 가진 글로벌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논의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세션 1) UN SDG 달성을 위한 농업정책의 역할

- (발표) Michael Clark(FAO)이 UN SDG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SDG 달성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서 기여할 바에 관하여 발표함.

32) OECD 대표부 전문을 토대로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 UN SDG는 2015년 9월 UN 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5년간의 개발 의제로서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 목표 성취를 위해 공동 협력(partnering)하고 여러 문제를 함께 고려(nexus)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예를 들어, 브라질은 농업을 통해 학교급식 문제, 학생들의 영양 문제 개선 및 소농들의 소득 증가라는 성과까지 도출한 사례가 있음.
- (토론 1) Alwin Kopse(스위스 연방농업청)는 SDG 달성을 위해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농업정책에는 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계, 정부 뿐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나, SDG 협의 시 생산자의 입장이 간접적으로만 대변된 경향.
 - SDG 달성을 위해 정책혼합(policy mix)이 중요하며, 이를 개인, 기관, 정부 사이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 (토론 2) Maximo Torero(IFPRI)는 SDG 성취를 위해 한정된 자원에 대한 비용부과(costing)의 필요성을 언급함.
- 특히 수자원과 관련하여, 푸드시스템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물에 대한 비용부과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합의가 필요함.
- 많은 참석자들이 물과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OECD의 연구, 분석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기타 개별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영국) SDG 성취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새로운 정책 변화 등과 관련하여 OECD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
 - (네덜란드, EU, 독일) 장차 물에 대한 접근성, 물 이용의 효율성 등과 관련된 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임. 이에 대한 OECD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
 - (독일) 난민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식량안보 문제임을 언급함.
 - (이스라엘) 수자원 이용 관련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기여 희망.
 - (사무국) 물 이용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여 수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지표 개발이 진행 중임. 최근에는 미래 물 관련 위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 임.

세션 2) 농식품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완화

- (발표) Pierre Schwartz(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는 2015년 COP21에서 도출된 파리협정 및 4% 이니셔티브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함.
 -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농업 분야의 취약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농업 분야의 역할이 강조됨.
 - 산림의 탄소저장고(carbon sink) 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산림 황폐화방지사업(REDD+)을 수행할 것을 권고함.
 - 프랑스는 COP21을 계기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완화 등 기후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4%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였으며, 각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함.
 - 4% 프로젝트를 통해 토양 내 탄소저장량을 매년 4%씩 증가시켜 나감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토양의 비옥도를 증가시켜 식량안보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토론 1) Robert Johansson(미국 농업부)는 파리협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완화 정책에 관하여 소개함.
 -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이하로 회복하기 위하여 26-28% 줄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후스마트(climate smart) 농업 토대 마련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함.
 -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배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지와 수자원의 복원력 향상, 탄소저장고 관리, 지역사회 내 대응력 및 복원력 강화, 탄소 격리 및 복원력 배양을 위한 연방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해 노력 중임.
- (토론 2) Karim Hussein(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소농들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갖추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농업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생산자가 참여하는 형평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지역생산자, 특히 소농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상력(bargaining power) 및 공동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로써 경제적, 환경적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자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파트너십 구축, 경험 공유, 생산자 참여 등이 중요함을 언급함.
 - (독일) 기후스마트와 관련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정확한 이해가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함.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농업인들의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프랑스는 정책개발 및 기술혁신에 있어 정책개발자, 과학기술인 뿐 아니라 생산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생산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칠레) 기후스마트와 관련한 국가, 지역 단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케냐) 케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양관리, 산림복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지원 및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세션 3) 국제농식품시장의 강화

- (발표) Evan Rogerson(WTO)은 국제농식품시장의 현황 및 제10차 WTO 장관회의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하여 소개하고, 다자간 시스템이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
 - 다자간 시스템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각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 및 체결이 증가하면서 현재 자유무역협정이 시장개방, 시장자유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장관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등 수출경쟁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다자간 시스템은 앞으로도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유무역협정과 다자간 시스템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토론 1) James Brown(주WTO뉴질랜드대표부)은 다자간 시스템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다자간 시스템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 제10차 WTO 장관회의의 수출경쟁 분야에서의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이미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 당사국 간 수출보조금에 제한을 가하고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큼. 이처럼 자유무역협정 체결 증가에 힘입어 장차 이번 장관회의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국내보조와 시정접근 부문에서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함.

- (토론 2) Douglas Nelson(BIAC)은 국제시장에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4월 OECD 장관회의에서 농산물 무역에 관한 OECD 연구 우선순위에 대한 BIAC의 권고가 채택, 고려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 BIAC은 국제시장에서의 무역왜곡적 행태 개선을 위해 OECD가 농업정책의 평가 및 측정활동 강화, 농업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의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장관회의에서 위 제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토론 3) Henk Riphagen(네덜란드 경제부)은 국제무역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국제시장이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 무역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거나, 식량가격폭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제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 특히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이전까지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 식량가격폭등 상황 발생 당시 식량수출국은 수출금지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국제무역시스템에 대한 불확신을 가중시켰음.
 - AMIS와 같은 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며, OECD의 연구, 분석 결과와 같은 증거에 기반하여 각국의 정책이 마련되고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
- 참석자들의 발언은 크게 무역왜곡적 요소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과 시장 활성화에 앞서 저소득층 소규모 생산자 및 수입국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되었음.
 - (한국) 시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당사국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이나, 현 상황에서 각국의 입장이 다르며 특히 소농과 개도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다자간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함.
 - (칠레) 칠레는 국제농식품무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무역 관련 규정이나 합의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WTO 장관회의의 결과의 영향 분석이 필요.
 - (칠레, 이탈리아)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비관세장벽의 영향 분석을 요청함.
 - (EU) WTO는 여전히 무역 관련 합의를 도출이 가능한 기구로서 의미가 있음.
 - (독일) DDA는 무역왜곡보조금 공공비축 등과 관련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장으로서 계속되어야 함. 무역비용을 감축을 위해 불필요한 관료제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OECD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함.

세션 4)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복원력

- (발표) Derek Headey(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은 최근 위기상황 발생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고, 복원력 배양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함.
 - 경제적, 환경적 위기상황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령 기후 관련 위기가 경제 부문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위기가 복합적,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원력 배양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거시경제적 충격과 같은 위협에 대한 경향 파악이 가능하고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복원력의 측정이 특히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력 관찰, 분석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토론 1) John Clarke(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EU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합의에 대해 소개함.
 - EU의 지속가능한 개발 합의에서는 농식품 분야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농업정책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외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EU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지향적 정책을 통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환경적 측면에서 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 도입, 사회적 측면에서 농촌을 단순하게 식량생산기지를 넘어서 정주공간으로 구축하는 것의 필요성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 (토론 2) Friedrich Wacke(독일 농식품부)는 푸드시스템에서 복원력 배양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농식품포럼(GFFA)의 성과에 관하여 소개함.
 - 푸드시스템에서 복원성 배양을 위해서는 다양성, 지속가능성, 생산성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파트너십 구축, 사전경보시스템 마련, 국제무역 시장에서의 투명성 확보 등이 중요함.
 - 1월 GFFA에서는 도시화 과정에서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농촌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식량안보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있어 전제조건이라는 점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었으며, 향후 이 같은 메시지를 G7, G20에 전달할 것임.

- 참석자들 중 기후변화, 가격유동성 위기 외에 많은 국가들이 가축질병에 관심을 표명함.
 -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덴마크) 건강 이슈와 관련하여 동물질병, 특히 항생제 내성 발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물보호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강조함.
 - (일본)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관리 차원에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중요성을 강조함.

2. OECD농업위원회 : 농업장관회의 준비회의

가.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02.03-4, OECD 본부(파리)
- 한국대표단 : 농림축산식품부 김경미 농업통상과장, 유정연 사무관, 박승민 전문관, 농업무역개발원 유병린 원장, 당 대표부 송남근 참사관
- 여타국 : OECD 회원국 대표단 및 OECD 관계자 등 약 90여 명 참석

나. 핵심요지 : 농업장관회의 준비관련 내용(장관회의 의제, 코뮤니케 및 배경문서 검토)

- (장관회의 의제) 저녁만찬 주제와 관련, 수정된 주제*에 만족한다는 입장(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과 무역이슈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나누어짐.
 - * 지난 IAG 미팅(1.13)에서 저녁만찬 주제로서 혁신과 무역이슈를 양분되어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사무국이 '공동목표달성을 위한 국제협력강화'로 수정
 - 기타, 본회의(plenary session)에서 원하는 장관들에게 발언기회를 모두 부여(일본, 칠레, 아르헨티나), 세션 1 의제가 환경에 치우친 점(아르헨티나), 장관회의 개최목적과 주제선정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프랑스) 등 의견 제시
- (코뮤니케) 다수 회원국들이 일부 표현의 적정성 여부를 지적하고 표현방식의 개선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관심사항을 반영코자 하였음.
 - 장관들의 편의를 위해 제목, 밑줄, 박스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방식으로 수정 제안(한국)
 - 'agro-ecological(8문단)'이라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어 온 단어가 아니므로, 'environmentally-sustainable(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등의 대안적 표현 제안(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칠레, 벨기에).

- 식량공급체인(EU, 터키, 슬로베니아), 동식물건강과 항생제내성(AMR)문제(터키,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바이오경제(일본,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책임 있는 기업경영(네덜란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구조적 변화 및 금년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내용 언급(일본), 도농연계(독일), 소농의 시장진입 정책(칠레,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식량손실 및 낭비(덴마크), 투명성(영국), 산림(스웨덴) 등에 대한 내용 추가를 제안
 - 무역 관련 언급을 늘려 다자주의와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자는 의견(뉴질랜드, 캐나다, EU, 독일, 칠레, 미국 등)과 보다 균형적 서술을 지지하는 견해(노르웨이).
 - 글로벌 농업 포럼(2.2) 결과 반영(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에 대한 체계적인 입장을 추가, 커뮤니케에 언급된 목표 달성 시점 및 다음 장관회의 개최시점 언급 필요. (스위스)
- (배경문서) 한국은 물 관련 이슈(5번 문서)에서 수자원집약작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라는 제안은 기반이 취약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 기후변화 이슈(4번 문서)에서 COP21등 기존의 기후변화관련 논의가 요약부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필요(스위스), 시장가격 예측(2번 문서)에서 물값을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국내 농업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고, 다른 대안이 제시 되지 않는다면 삭제 필요(이탈리아).
- (사무국) 장관회의 전체 세션에 참석국가 모두가 발언기회를 갖는 것은 무리가 있고, 3개의 소규모회의(만찬 포함)에 참석자를 계속 다르게 구성하여 논의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함.
- 커뮤니케의 수정 제안은 반영하여 보완할 것이나, 문서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임.
 - 배경문서는 그 동안 제시된 서면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완하여 정교화 할 것임. 다만, 정책권고는 그 동안 논의·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혹시 추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 요청.
- 홍보 등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Plan)
- (사무국) 장관회의 시작 전에 농업장관회의 공동의장, 농업무역국장이 함께하는 기자회견(pre-meeting)이 있을 예정임. 이는 회의 종료 후에 개최 하는 기자

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형식의 기자회견은 아닐 것으로 예상함. 회의종료 후 공동의장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며, 인터넷 중계, SNS, 동영상 게시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토록 할 예정임.

- (EU)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글로벌 포럼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OECD에서는 관련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농업장관회의의 관련 내용이 대표단 코너에는 게재되어있지만, 외부인들은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그리스) 인터넷 중계를 통해 더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위해서 회원국 및 초대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
- (사무국) 글로벌포럼의 경우, 명칭은 포럼이나 비공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음. 농업장관회의의 경우 대중에 공개되는 웹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며, 그곳에 관련된 정보와 링크를 게재할 예정임
- 사전미팅 관련, 이를 모든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 관심 있는 대중 + 전문가+언론 등 초대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중을 다양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IAG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을 제안함

○ 회의 운영·조직 관련 (Organizational Aspects)

- (UK, 그리스) 소그룹회의에서 관련, 장관을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장관과 실무자 간의 근접거리배치 필요.
- (체코)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어서 참가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등록기간 이후에도 참가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문.
- (아르헨티나) 회의 중에도 양자면담을 위한 장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
- (사무국) 소그룹회의장 뒤에 착석인원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을 것이나, 많은 인원이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청취실을 이용할 것을 장려함.
- 소그룹회의 테이블 크기를 늘리면 참석자간 친밀감(intimacy)이 떨어지므로, 각국의 장관 바로 뒤에 실무자가 착석할 수 있도록 테두리석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메일로 참가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일정공간을 양자면담 목적으로 계속 확보해놓을 예정이므로, 필요시 회의시간 중에도 양자 면담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3. 농업장관회의 준비 비공식회의(회원국)

- (사무국) 농업장관회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초청국을 제외하고 회원국 간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세션을 마련함.
 - 각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청국들의 참여 독려를 요청함. 일부 회원국들이 비용지원을 요청했는데, 사무국 차원에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회원국을 찾고 있음. 다음주 월요일(2.8)까지 코뮤니케 등 장관회의 배경문서 관련 서면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 (EU) 초청국 선정 시 일반적인 기준이 있었는지, 농업장관회의 이후 초청국들의 참여(engagement)와 이들과의 관계 지속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질문.
- (미국) 대표단 게시판에 참석 대표의 직급, 국가별 양자면담 계획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함.
- (사무국) 농업위원회의 국제관계 전략에 따라 장관회의 초청국을 선정하였으며, 이미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음. G20 국가 중 우리 회원이 아닌 국가, 아프리카 대표로서의 케냐, 태평양 연맹 구성원인 페루 등이 선정되었음.
 - EMS에 참가자 명단이 등록되기 전까지 명단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상당 참가자가 등록을 완료하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 예정.

[부록] 2010년 OECD 농업장관회의 배경문서 주요 요지 및 검토 의견

| 1.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와 WB는 ‘10년의 경기회복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경기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 - 다만, 농업은 금융분야 노출도가 적고,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많아 경기 침체 영향이 비교적 적음 ○ 소득감소 피해는 곡물부문보다는 축산업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의 피해정도가 크다고 봄 ○ 최근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은 당초 곡물 생산 공급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는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가 진정될 때 염두 해 두어야 할 사항 ① 경기침체에 농업부문 체질강화를 위한 추가 구조개혁 추진여부 ② 보호무역조치 제한 및 시장개방을 통한 경기회복 추진 ③ 경쟁력 있는 농식품기업에 자금지원 및 무역촉진 방안 ④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농업부문이 취할 구조조정 방안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는 농업부분 체질강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운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 또는 검토 중인 국가들(총 65개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08년 80%이상 점유하며 농림수산물 수입액의 97% 수준으로 개방수준이 높음 ○ 농업금융 시스템은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하여 정책자금, 농업정보, 시장상황 분석 자료 등은 공개된 시스템으로 제공 - 다만 농업과 비농업, 농업 내 산업부문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업 구조조정의 주요수단으로 금융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 2.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은 '50년까지 식량생산량을 100% 증대시켜야하나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응, 농업용 물 사용의 효율화 및 용수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함 ○ 미래 농업용수 관리정책은 에너지가격, 농장관리와 기술, 기후변화 등 요소도 고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현상과 농정개혁, 위험관리정책 및 시장에 기반한 접근방식과 결합하면 효과 증대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에서 수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용수 관리의 복잡성 및 다양성에 대한 인식제고 ② 농업용수 관련 제도 및 재산권 강화 ③ 농업용수에 대한 세금부과로 공급비용 확보 ④ 농업·물·에너지·환경 정책간의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 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대응력 확보방안 마련 ⑥ 수자원관리에 대한 지식·정보 부족문제 해결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최근 『물관리 정보화』 및 『자동화』를 중점추진 ○ OECD가 검토한 '농업용수의 물값 산정' 관련 내용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물 절약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물을 많이 쓰는 아시아 논농업에 있어 제약을 가할 경우 타격이 예상됨.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 3. 향후 세계 식량 수급전망과 식량안보의 확보방안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가격 전망 : 1~2년은 안정, 경기회복에 따라 재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은 평균 10~20% 상승, 식물성 기름은 30%이상 전망 ○ 식량안보는 국제적 정치현안이며, 투자, 빈곤감축조치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투자에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증가되며,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R&D, 인프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됨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가격상승에 대비한 식량안보 확보방안 마련 시 주요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생산자들에게 가격정보 전달 강화 ② 농업관련 연구 및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강조 ③ 농업지원, 에너지, 농업용수 정책 개선으로 수자원관리 효율화 ④ 위기관리 정책 강화로 향후 농민들의 가격변동성 대응력 확보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의 식량안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후 발생한 식량위기는 농업 및 식량안보에 대한 투자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식량위기는 생산부족 요인 외, 분배나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발생하였음. 따라서 곡물가격 변동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FAO나 WFP 등 국제기구 중심의 국제 공동연구가 우선 필요함(VIP 제안사항) ○ 국가단위의 식량안보는 ①적정한 국내생산기반 구축, ②비축역량 강화, ③과부족 해소를 위한 해외조달·무역시스템 구축 및 이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봄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으나 식량안보 관련 논의 시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언에 활용 |

| 4. 농가의 위험관리를 통한 농가경영안정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은 기상이변, 질병 등 위기로인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함. ○ 위기관리 수단으로 생산 다각화, 관개시설 개선, 선물시장, 보험 등이 있으며, 정부는 농가들이 시장의 다양성에 따른 시장전략을 잘 활용하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위기관리 정책 수립 시 시장실패 사례나 명확히 규정된 공정성 문제 등을 유념하여야 함.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에서의 위기관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형성 시 정보누락 등의 시장실패 요인 분석 및 제고 ② 대외 원조 시 지대(rent) 유발요인 제거 ③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정부 제 정책 간의 절충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감 정책이 농가의 복지향상에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 - 위기관리 조치는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역효과 최소화라는 취지를 벗어날 수도 있음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는 농가소득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방법을 달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농에 대해서는 소득규모를 키우도록 하며, 중·대농에 대해서는 생산, 가격위험에 대비토록 하는데 중점 ○ 한국과 같이 중·소농 비중이 큰 국가들은 대체로 시장규모가 작아 보험시장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정부가 유인시스템(보험료 일부 보조, 재보험 제도 등)을 개발하여 농업인과 보험회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 5. 농가 및 농촌경제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소득의 대부분은 비농업분야에서 창출되므로 다각화된 농촌 경제활동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교육 등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소득 다각화를 추구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임 ○ 농가는 농산물 제공이외에도 환경 및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 외 활동에 참여하며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음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개발에 도움을 주는 농업정책 ① 기초농업, 농촌경제발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농업정책 마련 ② 농촌경제의 특징,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 필요 ③ 농가의 다각화 전략인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촉진, 농업환경 보존 등의 긍정적 효과는 주요 농촌관광지에만 한정되는 문제점 보완 ④ 무상보조금, 교육활성화 등의 직접적 조치 등을 통한 농가소득 다양화 전략 마련 ⑤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제거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제의 다각화는 농식품 산업 경쟁력 유지, 지역사회의 보존, 농가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함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또는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 6. 농식품 무역 자유화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체제 하의 다자주의는 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 및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 세계화에 크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주의의 경제적 효과는 FTA 경제적 효과 보다는 훨씬 큼. ○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은 체결국 간에 무역 자유화를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비 가입 국가들에게는 차별적인 조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시장접근성 및 국내개혁 촉진 등의 자유화에 기여하며, 서비스·환경 등의 새로운 정책분야에서 국제적인 진전을 위한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DDA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글로벌 복지 최대화 ② 특혜잠식으로 피해가 야기되는 개도국 수출업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중요한 과제이며, 협상 타결을 위해 각국이 처한 정치 사회적 민감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ambitious and balanced outcome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 Mulilateralism vs. Regionalism 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역무역협정이 multilateral trading system을 보완할 수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보아 2004년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지역무역협정이 비 가입국들(non-participants)에게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non-discriminatory), 투명성(transparency이나)일관성(consistency) 제고 노력이 준수되어야 함. ○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특혜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DDA 협상에서도 preference erosion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으로는 특혜 관세 유지보다는 최빈개도국이 기술 원조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다만, 논의 과정 전반에 걸쳐 논리 전개에 활용 |

| 7. 비관세 조치를 통한 후생증진 | |
|----------------------------------|---|
| 배경 문서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의제 개요</div> <div> <p>○ 관세와 같은 전형적인 수입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관세 조치(NTMs)는 자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가공방식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세금, 규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있음. <p>○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애로가 있으나, 질병유입에 대한 위험도 감소 및 제품표시 강화 등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복지를 개선 효과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조치 평가의 목표는 비관세 조치의 비용 효과적인 측면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임을 공고히 하는 것임. </div> </div>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div> <div> <p>○ 비관세 조치 시 검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관세조치는 다양한 사회적 우려사항들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함 ②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여파에 대한 인식제고 ③ 비관세조치의 무역촉진 기능과 무역제한 기능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 ④ 최저비용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는 정책적 수단 강구 </div> </div>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검토 의견</div> <div> <p>○ 사회적으로 식품안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비관세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됨. </div> </div> |
| 대응 내용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div> <div> <p>○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p> </div> </div> |

| 8. 농업과 환경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국가들은 규제, 상호준수, 농업 환경 지불금 등 다양한 농업환경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충제 사용 및 폐기물관리에 대한 규제, 보호구역지정 등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상호준수 원칙에 따라 영농인은 구체적 환경의무사항을 이행해야만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EU,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은 농토와 같은 공공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농방식을 택한 농부들에게 환경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음. ○ 자연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정책 평가방식 및 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환경·천연자원보호 필요성 증대에 따라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 ① 농업생산과 환경문제간의 관계가 복잡하여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있음 ②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의 특수성 및 외적요인을 수용하고 내재화 하여야 함 ③ 환경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지식 및 정보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농가들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여 환경 보호 및 자원관리 증진에 기여토록 함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은 제한된 국토면적(998만 ha)에서 5,000만 인구를 부양해야 하므로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이 불가피한 현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농업 제도를 도입하고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5년 단위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매년 20% 이상 빠르게 성장 (2008년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서 12%, 농산물 시장거래에서 약 10%를 차지)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에서 1993년부터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농업환경지표는 한국의 농업환경정책 분야에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 9. 농정개혁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농업정책개혁을 지속적 추진 ○ 정책목표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소득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목표이나, 최근의 농업정책은 환경수준, 농촌경관, 식량안보 등과 같은 사회전반적인 문제 해결로 변화하고 있음. ○ 신규 정책은 생산과 지원 분리, 시장 기능으로 부작용 최소화 ○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모니터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표달성에 농업정책이 항상 최고의 방안은 아니므로 비농업 정책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시장솔루션을 강구해야 함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중요하나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임. 예를 들어 부채문제로 희생이 어려운 농가, 농업소득 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퇴출 농업인에게 적절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도시빈민화 등 사회적비용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가격지지 정책을 최소화하고 직접지불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다만 정책수혜자에게 일정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공성을 확대하여 지원에 대한 대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함.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 10. OECD 및 주요 신흥 경제국의 농업정책: 개혁 모멘텀 유지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농업정책은 WTO/DDA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OECD 지역 전반의 농정개혁을 촉진시키는 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E 기준 정책이전부문(주로 보조금)은 '86~'88년 농가 총 수령액의 37%에서 '06~'08년 23%로 감소 ○ 생산자 인센티브에 영향을 적게 주는 정책의 중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생산량이 아닌 다른 지표(면적, 가축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있음. - 일부 신규 프로그램(미국 직접지불 및 EU의 단일직불제)은 보조금 수령 자격조건에 생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조건부 보조금은 '86~'88년 전체보조의 4%에서 '06~'08년 33%로 크게 증가하였음. ○ OECD 지역의 정책왜곡은 상당한 수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E의 약 56%가 여전히 생산과 연계되는 등 비효율적 방식의 보조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 개혁의 모멘텀 유지 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함 : 신흥국의 경우 생산에 대한 정책적 방해요인 제거 ② 농민의 위기관리 역량강화 및 안정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③ 기존의 생산과 연계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농업보조금의 전달체계 개선 ④ 신흥국의 보조금 체계는 기존의 생산자 가격개입에서 개발 및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개편되어야 함 ⑤ 농업성장에 농촌빈민 포함 및 빈민에 대해 비농업분야를 통한 경제적 기회제공 등 농업성장 정책에 있어 신흥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 제고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PSE가 '06~'08 평균 61% 수준으로 회원국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OECD가 농업보조기표(예: PSE)로 평가한 한국의 농정개혁 진척상황은 긍정적이었음.(08년 한국농정개혁평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09년 10월 제50차 OECD 농정시장작업반 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쇠고기 PSE 계산방법이 개선되어 쇠고기 PSE는 62%→29%, 농축산물 전체로는 63%→60%로 감축될 전망이다.('06기준) ○ 한편, 미국과 EU는 PSE 중에서 국정보호에 다른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차이(시장가격지지, MPS)가 차지하는 비중이 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1%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WTO/DDA 타결 및 FTA 체결국 증가로 우리나라가 관세가 감축됨에 따라 PSE는 감소할 전망이다.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 11. 신흥국가 및 개도국의 영세농 문제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의 영세농에 대해서는 농업에만 의존하여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적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농업부문 내에서 뿐 아니라 농업부문 외에서도 가계의 수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농업경쟁력과 농업 외 부문에서의 소득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적 틀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농업정책은 그 전반적 정책조합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함. ○ 지난 50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농업부문의 인력이 감소하는 등 전체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농 지원 정책 마련 시 고려 사항: 다양한 농가의 형태를 고려하여 특화된 목표정책을 수립 ① 영세농가중 어떤 농가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② 생산성 향상 정책은 변화를 촉진하고, 비농업 부문의 기회도 창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투자와 연계되어야 함 ③ 농업으로부터 유출된 인력으로 인하여 사회적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농촌지역 개발 정책 마련 필요 ④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지출 간의 상쇄 및 보완작용으로 최선의 정책 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인식필요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농을 위해서 농촌지역 내 인적자원육성과 지역 및 농촌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력 향상정책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배경문서 내용에 동의함. ○ 다만, 산업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고령농 또는 빈곤농가에 대해서 소득다각화를 통한 농업외 소득 증가 외 복지지원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농촌 사회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는 직불제, 연금 등을 통한 영세·고령농의 소득지원, 농어촌의 사회적 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 정책을 실시하거나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개도국의 영세농 소득 증진을 위해 OECD 국가의 국제 농업협력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 12. 농업과 기후변화 | | |
|----------------------------------|-----------------------|---|
| 배경 문서 | 의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는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적응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 ○ 개도국의 농가는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자산 부족으로 생활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GHG 배출 저감 방안: 경작지 및 초지 관리개선, 훼손토지복원, 토지사용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농정방향은 GHG 배출이 낮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생산기술 개발촉진이 필요 ○ 기후변화 적응 활동: 농업정책개혁, 리스크관리 및 R&D, 재해보험, 미래 기후환경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품종/곡물/가축종 도입 및 수자원의 효율성 증대 등 |
| | 정책 입안자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접근법 마련 ①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 GHG 저감 및 분리활동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 ②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저(低) GHG 제품, 기술 등에 투자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 ③ GHG 배출을 저감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R&D 투자정책 마련 ④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농업 활동이 GHG 배출에 미치는 영향 측정역량 강화 ⑤ 기후 변화에 대한 생산자들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적응력 고양 정책 추진 및 취약 집단에 대한 보상 제공 등 |
| 2010 OECD 농업각 료회의 대응 | 검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메가트렌드로 범세계적인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세계 평균기온 0.74℃ 보다 훨씬 높은 1.5℃ 상승하였음. 농작물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월동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 기준)은 약 1,840만CO₂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9%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8년 8월에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함. |
| | 대응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이나 의제 특정적 대응은 없었음. ○ 기후변화 논의에 참고자료로 활용 |

**2015 OECD 농업정책 및 무역 연구 동향 분석 추진 연구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대응 준비)**

인 쇄 2016. 2.

발 행 2016. 2.

인쇄처 (주) 동양피앤씨 전화 031-424-3994 팩스 031-424-4360